2019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

2020. 1. 15

정부업무평가위원회

국 무 조 정 실

순 서

Ⅰ. 평가 개요 ····· 1

Ⅱ. 부문별 평가결과 ····· 5

1. 일자리·국정과제 ····· 7

2. 규제혁신 ····· 33

3. 정부혁신 ····· 40

4. 정책소통 ····· 47

5. 지시이행 ····· 52

Ⅲ. 기관별 종합 평가 ····· 55

Ⅳ. 후속조치 계획 ····· 59

Ⅰ. 평가 개요

Ⅰ. 2019년도 평가 개요

1 평가대상

○ 기 관 : **43개 중앙행정기관** (장관급 23개, 차관급 20개)

○ 기 간 : **'19. 1. 1 ~ 12. 31**

2 평가부문

❖ 정부 3년차임을 감안, **각 부문별**로 **결과·성과 중심** 평가항목 강화

❖ **포용국가, 생활적폐 청산, 생활SOC** 등 관련 과제를 **평가대상**에 **추가**

❖ **'정책소통'** 및 **'소통만족도'** 부문 **통합·평가**

① **(일자리·국정과제)** 일자리를 포함한 100대 국정과제 및 중앙행정기관별 **주요정책 추진성과** 평가

② **(규제혁신)**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한 **신산업분야 규제개선, 적극행정 활성화** 등 규제혁신 추진실적 평가

③ **(정부혁신) 사회적 가치** 실현, **신뢰받는 정부** 구현, **국민참여** 확대 등 정부혁신 추진실적 평가

④ **(정책소통)** 국정과제 등 **주요정책**에 대한 **국민 이해도 제고**를 위한 부처별 실적·성과 및 장차관 홍보노력 등 평가

⑤ **(가감-지시이행) 대통령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노력** 및 **성과**를 **평가**, 책임성 강화

《 '18년도 대비 평가부문 개편사항 》

'18년도 평가	
① 일자리・국정과제	65
② 규제혁신	10
③ 정부혁신	10
④ 정책소통	10
⑤ 소통만족도	5
가감 (지시사항 이행)	±3

⇨

'19년도 평가	
① 일자리・국정과제	65
② 규제혁신	10
③ 정부혁신	10
④ 정책소통 (소통만족도 포함)	15
가감 (지시사항 이행)	±3

* 「정책소통」・「소통만족도」 부문을 통합하여 정책소통 활동 - 성과 - 체감(만족도)의 일원화된 평가체계 마련

3 평가방법

○ **평가부문별**로 평가주관기관이 **평가지원단**을 구성, 시행계획 상 **평가항목**에 따라 **정량적·정성적** 평가 병행

○ 평가부문별 기관점수를 합산하여 **기관종합 평가**

○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 **평가결과 심의・의결**

4 평가결과 제시

○ **장관급**과 **차관급** 기관으로 구분하여 **기관별 등급** 부여 (S · A · B · C · D)

* 3등급(A 30%, B 50%, C 20%) 배분 후, 정평위 등 분야별 평가위원회에서 A그룹·C그룹 내 점수편차 및 탁월한 성과 창출여부 등 고려, S/D등급 부여(S·A·B·C·D)

○ 평가결과에 따른 **개선・보완사항 제시**

Ⅱ. 부문별 평가결과

1. 일자리·국정과제

1 평가 개요

□ 평가목적

○ 43개 중앙행정기관별 **100대 국정과제** 또는 주요정책과제의 **이행실적**을 **국민 눈높이**에서 객관적으로 **분석·평가**

* 국정과제가 1개 이하이거나 일자리 과제 추가 선정이 필요한 28개 중앙행정기관 대상으로 주요정책과제(62개) 선정, 국정과제와 동일한 방식으로 평가

□ 평가대상

○ 43개 중앙행정기관

구분	기 관 명 (직제순)
장관급 (23개)	기재부, 교육부, 과기정통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여가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보훈처, 방통위, 공정위, 금융위, 권익위
차관급 (20개)	인사처, 법제처, 식약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병무청, 방사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농진청, 산림청, 특허청, 기상청, 행복청, 새만금청, 해경청, 원안위

□ 평가방법

○ 정부업무평가위원을 중심으로 **'국정과제 평가지원단'** 구성 (450명)

- 분야별 **민간 전문가** 및 **정책수요자** 참여, 10개 분과로 구성

○ 분과별로 **평가지표**에 따라 **정량·정성평가** 병행 실시

□ 평가지표

○ 정책추진 노력(10%), 성과지표달성도(60%), 정책효과(30%)를 평가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정책추진 노력	• 과제 추진계획을 충실히 수립하고, 이에 따라 차질 없이 이행했는지 여부	10
성과지표 달성도	• 사전에 설정된 성과지표의 목표치 달성 여부	60
정책효과	• 성과지표로 측정할 수 없는 정책의 체감성과를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 종합 평가	30

2 평가 등급

* 직제순

구분	장관급 기관	차관급 기관
S	-	-
A	과기정통부, 농식품부, 산업부, 해수부, 중기부, 금융위	법제처, 조달청, 소방청, 농진청, 특허청, 해경청
B	기재부, 교육부, 국방부, 행안부, 문체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여가부, 국토부, 보훈처, 공정위, 권익위	인사처, 국세청, 관세청, 병무청, 경찰청, 문화재청, 산림청, 기상청, 행복청, 새만금청
C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방통위	식약처, 통계청, 방사청, 원안위
D	-	-

3 총 평

정책 추진여건

○ **미중 무역갈등 및 보호무역주의 심화, 글로벌 저성장** 등에 대응하여 자유무역 확산 및 신남방 등 **새로운 시장 개척** 필요

○ **수출·투자 부진, 소비 증가세 약화** 등 **경기둔화 과정**에서 신산업 육성, 주력산업 경쟁력 회복 등 **경제활력 제고** 필요

○ 저출산·고령화, 소득불평등 및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와 채용, 입시 등의 **특권 및 불공정 관행**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대응** 요구

○ **북미간 비핵화 협상 재개 지연, 남북관계 경색 등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정부 역할** 긴요

'19년도 주요 성과

❖ **포용적 복지** 실현을 위해 **全 생애**에 걸친 국가책임 강화

○ **기초·장애인연금 인상**(최대 25→30만원),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최대 26만명 신규 지원),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등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보강**

○ 초음파·MRI 등 **건강보험 적용 확대**, 치매 국가책임제 내실화(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 정식개소), **지역사회 통합돌봄 도입** 등 **국민 건강보장 확대**

○ **아동수당 대상 확대**(만 6세→만 7세미만),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확충(654개소·993학급), 초등돌봄 확대,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시행('19년 고3) 등 **보육·교육의 포용성 강화**

○ **강원산불**('19.4월) **조기 진화** 및 아프리카 돼지열병·구제역 총력 대응, 교통·산업 안전 강화(사망자 수 549명 감소), **미세먼지 범국가적 대응** 등 **안전한 대한민국 조성 추진**

○ 최저임금 인상 및 주 52시간 근로제 확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중앙부처 여성 관리직 확대(과장급 17.5→20.8%) 등 **노동시장 내 격차 해소 기반 마련**

○ **근로장려금 확대**(219만 가구↑, 3조원↑), 실업급여 및 고용·산재보험 보장성 강화 등 일자리 안전망 확충으로 **소득분배지표 개선**

❖ **경제 활력** 제고 및 **신산업** 육성을 통한 **혁신적 포용국가** 토대 마련

○ 주요국 대비 양호한 **경제성장률**, WEF **국가경쟁력** 2년연속 2단계 상승, 국가부도위험 최저(CDS프리미엄 25bp), 외환보유액 최고치(4,088.2억불), 역대 **최고 국가신용등급**(S&P, AA유지) 등 **견고한 대외평가 유지**

○ 미중 무역갈등·세계 경제 둔화에도 불구, **3년 연속 무역 1조불, 11년 연속 무역 흑자**(수출 7위, 5,424억불), **5년 연속 외국인직접투자 200억불 달성**

○ **세계최초 5G 상용화**, **DNA + BIG3**(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집중투자, **규제 샌드박스** 도입(혁신금융 등 195건), **제2벤처붐** 조성(유니콘 기업 11개, 역대 최고 신규벤처투자액 4조원 달성) 등 **혁신성장 기반 강화**

○ 조선 수주실적 1위, 반도체 세계 1위 초격차 유지 등 **주력업종 경쟁력 회복**,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등 **제조업 혁신** 추진

○ **순환출자** 해소, 불공정관행 개선, 상생결제규모 100조원(2년 연속) 등 공정경제 확산,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생계형적합업종** 첫 지정(8개) 등 **영세자영업 지원강화**

○ 대규모 **공공·민간투자 확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누적 17.9만명),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11.3만명), 취업취약계층(청년·여성 등) 지원 강화 등으로 **고용의 양과 질 개선**

❖ 대화·협력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 및 **동아시아 평화·번영의 길** 마련 노력

○ **남북미 판문점 정상회동**(6.30)·국제사회(UN 등) 지지 확보 등 **북핵 해결 노력**, 한미 정상회담(3회)·한일중 정상회의(12.24) 등 **주변국과 협력 강화**

○ **핵심전력 구축**(핵·WMD 대응을 위한 전력 강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준비(한미 연합검증) 등 **튼튼한 안보태세 확립**, 장병 봉급 인상 등 복무여건 개선

○ 남북 **철도·도로 연결**(자료 상호 교환) 등 **남북경협** 추진, **서해 5도 어장** 확장, DMZ 평화의 길 조성(고성·철원·파주) 등 **평화체험의 장 마련**

○ **아세안 10개국 순방** 조기 완료,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등 **신남방정책** 추진 가속화 및 RCEP·인니·이스라엘·중미와 FTA 타결 등 **교역 다변화**

❖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자치분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 추가 조세부담 없이 **국세의 지방세 전환**(3.3조원), 중앙지방협력회의법(제2국무회의 신설, 制)·지방자치법(전부개정) 추진, 지방이양일괄법(400개 국가사무, 制) 국회통과('20.1월) 등 **지방분권 가속화**

○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23개 사업, 25조원 예타면제), **생활SOC** 확충(8.6조원), 도시재생뉴딜(116곳)·어촌뉴딜300(70곳), 규제자유특구 지정(14개),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원(14개, 420억원),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확산 등으로 **지역경제 활력 회복 추진**

○ **쌀값 안정화**(19만원), 쌀 관세율 유지(513%), 공익형직불제 도입 등 **농촌 소득안전망 확충**, 3·6·5생활권 확대(1,058개) 등 **주민 삶의 질 제고**

❖ **국민주권 강화**를 위한 개혁 추진 및 **나라를 위한 희생·헌신**에 대한 **예우** 강화

○ **공수처 설치법** 제정·검경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 **반부패 노력**(대통령 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으로 **국가 청렴도 제고**(부패인식지수 역대 최고)

○ **참정권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선거연령하향, 만19→18세), **표현의 자유 강화**(언론자유지수 순위 지속 상승), 인권친화적 수사개혁 등으로 **국민 권리 신장**

○ **3·1운동·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 지정·5.18 진상조사위 출범 등 **독립·호국·민주화**를 위한 **희생·헌신**에 대한 **예우 강화**

보완 필요 사항

○ 저출산·고령화 심화, 1인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적 변화에 따른 교육·복지·고용 등 사회 전분야 대응** 필요

○ 공유경제, 규제 개혁 등 **혁신성장 추진 과정**에서의 **사회적 갈등 해소 및 대타협 방안** 마련

○ **일자리**(취업자 수·고용률) 및 **소득분배**(분위별 소득증가율) **지표**는 개선되고 있으나, **국민 체감도**를 높이는 **다각적인 노력** 필요

○ **국민의 공정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특권과 불공정 해소 노력 필요**

○ **미중일러 등 주변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한반도 비핵화**, **남북관계 등 실질적 진전**을 위한 역할 수행

○ 신산업 육성, 공정경제, 노동자의 기본권 보호 강화, 자치분권 등 **개혁정책 추진을 위한 입법 지연 해소**

4 국정목표별 평가결과

내삶을 책임지는 국가

❖ 국민의 **전 생애**에 걸친 **기본생활 보장** 및 **국가책임 강화**로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

❖ **노동 존중** 및 **성평등 실현** 등을 통해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다함께 잘사는 나라**' 조성

주요 정책성과

□ **모든 국민의 안정된 삶** 보장을 위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 (**저소득층**)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확대***, 긴급지원 대상 확대** 및 자활급여 인상(최대 26%↑) 등 **저소득층 보호 강화**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역대 최고('16년 163만명 → '19년 188만명)

** 긴급지원 대상 건수 : ('18.1~11월) 22.4만건 → ('19.1~11월) 30.7만건

○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19.7월~), **장애인연금** 조기 인상*('19.4월) 등 **장애인 권익 증진**

* 생계·의료급여 수급 장애인 25→30만원으로 인상(당초 목표 '21년) / 전체 37만명 지급('19.12월)

○ (**아동**) **아동수당** 대상 확대*, 위기아동 지원 통합·제공을 위한 **아동권리보장원** 신설('19.7월) 및 보호종료 아동 **자립수당 신규 지급****('19.4월) 등 **국가책임 강화**

* ('18년) 소득·재산 하위 90% 만 6세 미만 아동 → ('19년) 만 7세 미만 전체 아동

** '17.5월 이후 보호 종료된 아동 5천여명 월 30만원 지급, 그 외에도 청년매입임대주택 제공(240호), 사회적기업 취업 지원 등 소득·주거·일자리 종합지원 강화

○ (**어르신**) **기초연금** 조기 인상* 및 **치매 국가책임제** 내실화**, 수요자 맞춤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도입('19.4월) 등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

* 소득하위 20% 어르신 25→30만원으로 인상(당초 목표 '21년) / 전체 530만명 지급('19.9월)

**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 정식개소 완료, '19년 118만명 이용

***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한 방문형 의료·요양·돌봄·주거 등 통합제공

○ (**다양한 가족**) **한부모·조손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19.1월), 채무자 정보 확보 절차 간소화로 **양육비** 이행률 제고** 등 다양한 가족의 **양육 지원 강화**

* 저소득 한부모 : ('18년) 만 14세 미만, 월 13만원 → ('19년) 만 18세 미만, 월 20만원
조손가족 : ('18년) 만 14세 미만, 월 18만원 → ('19년) 만 18세 미만, 월 25만원

** ('18년) 32.3% → ('19년) 35.6%

□ **국민 생활비** 지원 강화로 **체감 복지 증진**

○ **(주거)** '19년 **공적임대주택** 18만호* 공급 및 주거비용 지원 확대**, **신규 공공택지** 공급 확대 추진(28곳 11만호) 등 **주거 안정성 강화**

* 저소득층 5.7만호, 청년 2.8만호, 신혼부부 4.3만호, 고령자 0.9만호 등

**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 대출한도(최대 2→2.4억원) 및 대상(혼인기간 5→7년 이내) 확대 등

○ **(의료)** 초음파·MRI검사* 등 **건강보험 적용** 확대 및 **재난적 의료비** 지원(소득 하위 50%)**, 동네의원 **만성질환관리** 서비스*** 제공 등 **국민 건강관리 지원** 강화

* 하복부 초음파('19.2월 적용) : (기존) 5~15만원 → (적용 후) 2~5만원
두경부 MRI('19.5월 적용) : (기존) 50~72만원 → (적용 후) 16~26만원

** 고액 의료비 발생 시 최대 3천만원 지원, '19년 11,142건(259억원) 지원

*** 의원급 의료기관 이용 고혈압·당뇨병 환자 대상 연간 관리계획 수립, 비대면 환자 관리(블루투스 연동 혈압계 등 ICT 활용) 등 포괄적 의료·관리서비스 제공('19년 등록환자 : 17.2만명)

○ **(교통·통신)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및 '100원 택시' 확대**, 취약계층 통신비 요금 감면 및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으로 **연 2조원의 가계통신비 경감**

* 구리-포천(3,800→3,600원), 천안-논산(9,400→4,900원)

** ('18년) 126개 시군구, 36만명 이용 → ('19년) 136개 시군구, 40만명 이용

□ **국민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한 대한민국** 조성

○ **강원 산불**('19.4월) 조기 진화* 및 **태풍 피해 최소화**** 등 **자연재해 전력 대응, 포항지진특별법** 국회 통과('19.12월)로 지진 진상규명 및 **피해구제 기반** 마련

* 청와대 중심 재난 컨트롤타워 구축 및 전국 소방장비·인력 총동원으로 조기 진화

** 재산피해 2,172억원(최근 10년 평균 3,181억원, '02년 루사 5조 1,479억원)

○ '19.9월 최초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총력 대응*,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 선제적 예방조치 등 **가축전염병 피해 최소화****

* 살처분, 경계지역 야생멧돼지 집중포획 등 고강도 대책으로 경기북부 지역 외 추가확산 저지

** AI 발생(건) : ('16/'17년 동절기) 383 → ('17/'18년 동절기) 22 → ('18.3월~현재) 0
구제역 발생(건) : ('15년) 185 → ('16년) 21 → ('17년) 9 → ('18년) 2→ ('19년) 3

○ **국민 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교통안전·산업안전·자살예방) 추진으로 **교통·산업안전 사망자 수 감소***,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등을 위한 법**·예산*** 기반 마련

* 전년동기 대비, 교통 : 12.5% 감소(△433명, '19.1~11월)/산업재해 : 11.9% 감소(△116명, '19년)

** 어린이보호구역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사망사고 가해자 가중처벌, 경사진 주차장 내 고임목 설치 의무화 등 근거 마련(「도로교통법」 등(일명 '민식이법', '하준이법') 개정)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1,275억원(전년대비 6배), 소방 대형헬기 144억원(신규) 편성 등 '20년 주요 안전예산 대폭 증액

○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에 포함,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 출범('19.4월), 고농도 시 **비상저감조치 전국 확대** 및 계절관리제 도입 등 **범국가적 대응**

* 「재난안전법」 개정으로 사회재난의 범위에 미세먼지 포함('19.4월)

**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 ('16년) 26㎍/㎥ → ('19년) 23㎍/㎥

□ **노동시장 내 격차 해소**로 **차별 없는 일터** 조성

○ **최저임금 단계적 인상**('18년 7,530원 → '19년 8,350원)으로 임금분배 구조 개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노동시장 양극화 완화

* 저임금노동자 비중 : ('17년) 22.3% → ('18년) 19.0%, 임금 5분위 배율 : ('17년) 5.06배 → ('18년) 4.67배
** '17~'19년(누적) 17.9만명 전환, 정규직 전환 이후 연봉증가 : 391만원

○ **주 52시간제**('18.7월 단계적 시행) 현장안착* 지원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시행('19.7월), **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 등 일하는 방식·문화 개선

* 주 53시간 이상 취업자 수(천명) : ('17년) 5,318 → ('18년) 4,505 → ('19년) 4,027
** 아빠육아휴직 인센티브 강화(월 상한액 200→250만원) 등으로 남성 육아휴직자 수 증가

○ **주요 관리직 여성** 비율 확대* 및 **여군 최초 소장** 진급, 기업과의 자율 협약 등을 통한 기업의 여성 임원 확대** 등 **여성 대표성 제고**

* 고위공무원 : ('18년) 6.7% → ('19년) 7.8%(잠정), 군인간부 : ('18년) 6.2% → ('19년) 6.8%
** 매출액 500대 기업 여성임원 : ('15년) 2.4% → ('18년) 3.6%

□ **보육·교육의 포용성 제고**로 **함께 키우는 사회** 구현

○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 강화를 위한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확충,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으로 **초등돌봄 확대**** 등 **부모 양육부담 경감**

* ('18년) 574개소·501학급 → ('19년) 654개소·993학급 확충
** ('18년) 36.3만명 → ('19년) 39.6만명 이용

○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도입***을 통한 **회계 투명성** 확보, 모든 **어린이집**의 운영 과정에 대한 **의무평가제** 시행('19.6월) 등으로 **학부모 신뢰 제고**

* 200명 이상 유치원 567개원 100% 도입, 도입 희망 유치원 753개원 도입

○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시행*, **사립대학 입학금** 단계적 감축 및 **반값 등록금** 지원 확대(기준중위 소득 120→130%), 대학 기숙사 확충** 등 **교육비 부담 경감**

* ('19년) 고3 → ('20년) 고2·고3 → ('21년) 全학년
** 수용인원 및 수용률 : ('18년) 2.9만명, 21.7% → ('19년) 3.6만명, 22.2%

□ **모두가 함께 누리는 문화** 조성 및 **관광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문화·체육 생활 SOC**(체육관, 도서관 등) 확충('19년 348개), 근로자 **국내휴가비** 지원 확대* 및 저소득층 통합문화이용권 금액 인상** 등 국민의 문화·체육 참여 확대***

* ('18년) 2만명 → ('19년) 8만명 ** ('18년) 7만원 → ('19년) 8만원
***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 ('16년) 78.3% → ('19년) 81.8%
생활체육 참여율 : ('17년) 59.2% → ('19년) 66.6%

○ 외래 관광시장 다변화(非중국 중화권 등) 및 고부가 관광산업 육성으로 **외래 관광객 수* 역대 최대기록** 및 세계경제포럼(WEF) **관광경쟁력평가 최고순위**** 달성

* ('16년) 1,724만명(非중국 917만명) → ('17년, 사드배치 後) 1,334만명(非중국 917만명) → ('18년) 1,535만명(非중국 1,056만명) → ('19년, 잠정) 1,750만명(非중국 1,149만명)
** ('15년) 29위 → ('17년) 19위 → ('19년) 16위

보완 · 개선 사항

□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복지 사각지대 발굴체계 보강

○ 생활고로 인한 북한이탈주민 모자 사망('19.7월), 서울 성북구 네 모녀 및 인천 계양구 일가족 사망('19.11월) 등 **복지 사각지대 사례** 발생 지속

○ **신청주의** 복지의 근본적 한계,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등에 대한 보완 시급

☞ **포괄적 신청주의*** 도입 등 신청주의 복지 보완, 연계정보 확대 등 사각지대 발굴 강화, 이웃의 단절을 보완하는 **지역사회 통로 구축** 등 기존 체계 보강

* 기존 복지급여 수급자에 신청 가능한 사업 사전제시, 원하는 사업 포괄적 신청토록 지원

□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한 사회적 대화 적극 추진

○ **노동존중사회 기본계획 수립**, 특고 노동기본권 보장, 근로자 대표제도 개선 등 주요의제 **경사노위** 논의 지연*

* 경사노위 정상화('19.10월) 이후 노사정 간 논의 시작 단계

☞ **경사노위**에서 적극적 **소통과 협의**를 통해 주요의제에 대한 **합의안 도출 노력** 강화

□ 의약품 안전 관리체계 개선

○ 인보사케이주('19.5월), 라니티딘('19.9월) 등 **의약품 안전사고 발생** 및 사후관리 미흡으로 의약품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 불신** 초래

☞ 환자 정보의 조속한 파악 및 **피해보상 지원** 등 조치, 재발 방지를 위한 **허가·심사** 단계에서의 **안전성 검증** 강화

□ 불법폐기물 관리 철저

○ **불법폐기물**로 인한 주민피해 지속에도 불구, **폐기물 처리 지연***

* 연내 불법폐기물 전량 처리 목표 → 70% 처리(120만톤 중 84만톤 처리)

☞ 잔여 물량 조속 처리와 함께, 지자체의 책임 있는 공공관리 및 발생지 처리 확대, 민간 시장의 질적 성장 등 **폐기물 관리 시스템 근본 개선**

더불어 잘사는 경제

❖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의 3대 정책기조 아래 일자리창출·경제혁신·공정질서확립 등 **'사람중심 경제'**를 본격 추진

❖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하에 우리경제 전반의 **활력과 역동성**을 강화하여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 기반 구축**

주요 정책성과

□ **거시경제 성과창출**로 **한국경제의 국제적 위상 강화**

○ 30·50클럽 중 2위의 **경제성장률, 국가신용등급** 역대최고, **국가부도위험 최저·외환보유액** 최고치, 양호한 **재정건전성**(OECD 4위) 등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용

* △30-50클럽 '19년 경제성장률(%,IMF,'19.10월) (미)2.4 (한)2.0, (프)1.2 (영)1.2 (일)0.9 (독)0.6 (이)0.0 △국가신용등급 최고등급인 AA 유지(S&P,'16.8월~) △국가부도위험(CDS프리미엄, 12.12) 25bp △외환보유액 4,088.2억불('19.12월) △GDP대비 일반정부부채 비율('18년) 40.1%(OECD 평균 109.2%)

○ **WEF 국가경쟁력평가** 종합순위 **13위***(2년 연속 2단계 상승), 기업환경평가 190개국 중 5위** 등 **국제사회는 우리나라 경제를 견조하게 평가**

* '19년 세계경제포럼 국가경쟁력평가 결과 거시경제 안정성·ICT보급부문 2년 연속 1위
** '19년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 결과 6년 연속 TOP 5달성, G20국가 중 1위

○ 미중 무역갈등·세계 경제 둔화에도 불구, **3년 연속 무역 1조불, 11년 연속 무역 흑자***(수출 7위, 5,424억불), **5년 연속 외국인직접투자 200억불 달성**

* 무역 1조불 이상 달성국 중 제조업 기반으로 흑자를 이룬 국가는 3개국(한국,독일,중국) 불과

○ **신남방·신북방 경제협력**을 통한 **교역 다변화***, **세계 최대 메가 FTA**인 **RCEP 협정**** 등 신규 FTA(인니, 이스라엘, 중미, 영국)로 교역 증진

* 신남방 지역 수출 비중 최초로 20% 돌파, 신북방 수출 전년 대비 23.3% 증가
**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 16개국 참가, 세계GDP의 32%(27.3조불), 세계인구의 48%(36억명)

□ 민관협력을 토대로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적극 대응**

○ 일본의 3대 품목 수출규제(7.4)·백색국가 배제(8.28) 이후, **기업현장애로 해소*** 및 **단기공급 안정화**를 위한 조치 추진(인허가 기간 단축, 특별연장근로 허용 등)

* 민관합동지원센터 통한 물량·대체처 확보, 생산설비 확충, 금융지원 등 1,600건 이상 지원

○ 강력한 **추진체계**와 **법적 기반 확보***, 일본 규제 3대 품목에 대한 수입국 다변화·국내생산 등으로 **소재·부품·장비 공급안정 유지**

* 「소재부품장비 특별법」을 20년만에 전면 개편('19.12월), 수출규제 대응 컨트롤 타워로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출범('19.10월), 긴급추경편성(2,732억원), 특별회계 신설('20년 2.1조원)

○ 근본적 산업 체질 개선과 대외 의존도 탈피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100대 전략품목'** 선정·개발에 착수, **자립화 기틀 마련**

*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6대분야 핵심전략 품목 선정, R&D 5조원 이상 투자(~'22년) 및 긴급 기술개발이 필요한 대형 R&D사업 예타면제 등

□ 신산업육성 및 혁신성장기반 구축을 통한 선도형 경제로 전환

○ **데이터·5G·AI** 및 **수소경제** 집중 육성으로 **세계 최초 5G 상용화**('19.4월), 수소차 보급확대, ICT 분야 국가경쟁력 2년 연속 세계 1위 등 성장 가시화

* △빅데이터 플랫폼(10개)·센터(100개) 구축 △5G 가입자수 증가('19.4월 27만 → 12월 460만명) △수소차 보급 5,097대('19.12월), 수소충전소 54기(착공 포함)('19.12월), 수소시범도시 선정('19.12월 3곳)

○ **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등 BIG3 분야의 집중투자* 및 드론·재생에너지·핀테크 등 **신산업분야 성장세** ** **본격화**

* 민간투자(~'30년) : 시스템반도체 133조원, 미래차 60조원, 바이오헬스 40조원

** 재생에너지 보급목표 1.5배 초과달성('19년), 핀테크 도입지수(67%, '19년), 전기차(31,886대, '19.11월)

○ **규제 샌드박스 도입*·규제자유특구 지정**(14개 시·도)으로 신산업 분야의 先허용·後규제 체계로 전환, 규제입증책임제·적극행정 확산** 등 **규제혁신체계** 구축

* 4대분야(ICT·산업융합·금융혁신·지역특구) 195건 규제특례 승인('19.1~12월)

** 규제입증책임제 도입(1,017개 정비),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19.8월) 및 공직사회 홍보·확산

○ 국가 **R&D 투자확대**('19년 20조 →'20년 24조), 연구자 중심의 **R&D 체계혁신***, AI 대학원 신설('19년 3개) 등 **혁신인재 양성** ** 등을 통한 혁신기반 구축

* 연구비 관리시스템 통합(17개→2개, '19.9월) 및 사용방식 표준화·간소화(R&D관리규정, '19.9월)

** KAIST·고려대·성균관대('19년), '20년 5개 추가 등을 통해 '23년까지 총 20만 혁신인재 육성

□ 벤처창업·투자활성화 및 주력산업 회복으로 경제활력 제고

○ **신규 벤처투자** 역대 최고치('19년 4조원), **유니콘 기업**의 급격한 증가('18년 6개→'19년 11개), **「벤처촉진법*」 제정**('20.1월)으로 **민간주도의 벤처생태계** 조성

* 벤처투자제도 일원화, 투자제한업종 대폭 완화, 조건부지분인수방식 도입, 펀드운용 자율성 강화 등

○ **대규모 기업투자를 촉진***하고, 지역밀착형 생활SOC사업확대·도시재생 뉴딜 본격화** 등 **공공부문의 투자확대**를 통해 **경제전반의 활력제고**

* 120조 규모 최첨단 반도체 클러스터 단지(용인) 조성('19.3월) 등 44개 프로젝트 추가 발굴

** 생활SOC : ('19년) 8.6조원 ('20~'22년) 30조원 /도시재생뉴딜 : ('18년) 100곳 ('19년) 116곳

○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19.6월)에 따른 혁신가속화로 자동차·조선 등 주력업종의 꾸준한 성과* 및 반도체 세계1위 초격차 유지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 회복**

* 친환경차 수출 34.7% 증가('19.1~11월), 2년 연속 조선 수주 세계 1위 달성

□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및 **대·중소기업간 상생** 정책 추진

○ 하도급·수위탁 분야 **불공정 관행 개선** 및 **순환출자 해소*** 등을 통한 정당한 경쟁과 보상을 보장하는 **공정경제 확산**

* 대기업 순환출자 고리 90% 해소 : 순환출자고리 수 ('17년) 282개 → ('19년) 13개

○ **상생결제금액 2년 연속 100조원**, 민간기업의 **상생기금 출연 최초로 2천억원** 달성,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수* 증가, 중기중앙회의 납품단가조정협의회 참여 추진 등으로 **대·중소 상생협력 기반** 마련

* 성과공유기업 증가(누적) : ('18년) 10,794개 → ('19년) 31,171개(2만개↑)

□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강화 및 자생력 제고**

○ **생계형 적합업종 첫 지정**(서점업 등 8종)을 통한 소상공인 사업영역 보호, **「소상공인기본법*」 제정**('20.1월)으로 소상공인을 독자적인 정책영역으로 확대

* 소상공인정책심의회 규정, 사업영역보호, 사회안전망 확충, 공제제도 확립, 판로확보 등 신설

○ **카드수수료 인하***, 영세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1~2등급→1~4등급), **노란우산공제** 확대, **제로페이** 도입 확산 등을 통해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 카드수수료 인하('17.7월, '19.1월)로 연간 1.4조원 부담 경감

○ 온라인쇼핑 증가·신기술 등장 등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 **소상공인 온라인 시장 진출 지원*·스마트상점 보급**** 등을 통해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지원**

* 1인 소상공인 미디어 플랫폼 구축, 온라인 판로채널별 입점 및 콘텐츠 제작 지원 등

** IoT, VR·AR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소상공인 사업장에 보급·적용, 스마트 기술개발 추진

□ **고용여건의 뚜렷한 회복세** 및 **가계소득증가**로 포용성장의 성과 가시화

○ **상생형 지역일자리** 확산(광주 등 6개 지역), 정부·공공기관 비정규직 전환(17.9만명)·**공공부문 일자리 충원**(11.3만명, '19.11월), 취약계층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으로 **고용의 양과 질 개선***

* '19년 고용동향(전년비) △고용률 : 66.8%(0.2%p) △취업자 수 : 2,712.3만명(30.1만명↑) △실업률 : 3.8%(0%p) △상용직 비중 : 69.5%(0.9%p), 통계작성('89년) 이후 최대

○ **유망서비스업 성장**에 따른 **취업자 확대***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서비스업 취업자 수(만명) : ('17년) 1,880→('18년) 1,885(+5만명)→('19년) 1,920(+35만명)

* 관광산업('19.10월 기준) : GDP내 관광산업 규모 52.3조('18년 대비 6.9% 증가), 관광산업 총고용 83.2만명('18년 대비 2.3% 증가)

○ **근로장려금(EITC)** 확대·**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교통·통신비 등 **생활비 부담경감**, 서민용 안심전환대출(20조원)·중금리대출확대(7.2조) 등 금융지원확대로 **가계소득증가***

* '19.3분기 분위별 소득증가율(전년동기비, %) : (1분위) 4.3 (2분위) 4.9 (3분위) 4.1 (4분위) 3.7 (5분위) 0.7

보완 · 개선 사항

□ **경제활력제고 정책의 현장 체감도 강화**

○ **글로벌 경기둔화**, 미중 무역갈등 등 **대외적 불확실성**으로 투자부진과 수출감소 지속 등 **우리 경제의 어려움 지속**

○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한 공공 · 민간투자 활성화, 수출활력 제고 대책을 추진 중이나, **국민 체감적 성과는 여전히 미흡**

☞ 신산업육성, 벤처활성화 등 혁신성장의 성과를 가시화하되, **민생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현장 체감도 강화 방안 마련**

□ **중장기 미래전략 강구**

○ **인구구조 변화·4차 산업혁명·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대내외 환경변화로 **기존**의 추격형 **경제발전모델은 한계에 직면**

☞ 미래성장동력 육성·4차 산업혁명시대 혁신인재 양성·수출구조 혁신 등 **경제 전반의 체질개선 및 구조개혁을 담은 미래전략 마련 필요**

□ **경제활력 및 공정경제를 위한 입법과제 추진**

○ **공정경제 및 경제활력·신산업 분야** 성장에 필수적인 **법령 제 · 개정이 지연**되어 성과창출 본격화에 한계

* 공정거래법(전속고발제 부분 폐지 등), 상법(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보건의료기술진흥법 등 국회계류중

☞ **주요 입법과제가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입법 필요성, 시급성 등에 대한 **국민 이해 제고**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

- 입법적 노력과 병행하여 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행정적 차원에 가능한 조치**(체계 정비, 시범사업 등)는 적극 발굴하여 추진

사람중심 일자리

❖ 사람중심 경제의 실현 기반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
❖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및 **일자리 질 개선** 추진

주요 정책성과

□ 인프라 확대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취업자 수 및 고용률 개선*, 상용직 근로자 비중 증가** 등 **주요 고용지표 개선**

* 취업자수(명): ('18년) 2,684만 → ('19년) 2,712만 / 고용률(15~64세, %): ('18년) 66.6 → ('19년) 66.8
** 상용직 비중(%): ('16년) 66.4 → ('17년) 67.4 → ('18년) 68.6 → ('19년) 69.5, 통계작성('89년) 이후 최대

○ **일자리사업예산** 확대*,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 강화, 고용서비스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공공 고용서비스 발전방안」** 마련('19.6월) 등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에 주력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17년) 15.9조원 → ('18년) 18.0조원 → ('19년) 21.2조원 → ('20년) 25.5조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마련('20년~), **실업급여 보장성 확대**(지급액 10%p↑, 지급기간 30~60일 연장), **내일배움카드 발급 확대**('19.7월~)** 등 일자리 안전망 강화

*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구직촉진수당 지급(50만원×6개월) 또는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45세미만 대기업 저소득 근로자(월소득 250만원 미만) 포함 등, ('18년) 62만명 → ('19년) 71.4만명

○ **근로장려금** 확대*, 고용실적에 따른 **중소기업 정책금융 이자환급 인센티브 확대 제공**(최대 2%, 50백만원→납입이자 이내), **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 확대·연장 등

* 근로장려금: ('18년) 179만 가구, 1.3조원 → ('19년) 388만 가구, 4.3조원 / 219만 가구, 3조원 증가

□ 대상·지역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통한 고용기회 확대

○ **(청년·여성) 청년 취업·창업*** 지속 지원, 여성 차별없는 일터 조성을 위한 **적극적고용개선조치제도**(AA) 및 **경단여성 무료 직업교육** 확대 시행 등으로 청년, 여성 고용 증가**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18년) 12.8만명 → ('19년) 14.1만명 / 청년내일채움공제: ('18년) 15.5만명 → ('19년) 25만명 / 청년전용창업자금: ('18년) 1,822개사, 1,500억원 → ('19년) 1,536개사, 1,300억원 등
** 청년고용률(15~29세) ('18년) 42.7% → ('19년) 43.5% / 여성고용률(15~64세) ('18년) 57.2% → ('19년) 57.8%

○ **(신중년·고령자)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확대*, **퇴직자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20.5월~), **노인 일자리** 확대('18년 54만개 →'19년 67만개)로 퇴직·고령자 일자리 지원

*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원 대상 : ('18년) 74개 직무, 1,159명 → ('19년) 213개 직무, 3,119명

○ **(지역) 노사상생형 지역 맞춤형 일자리모델** 확산*, **고용위기지역**(1년)**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조선업, 6개월) **지정연장** 등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및 고용위기 대응 강화

* 광주(자동차), 경남 밀양(뿌리기업), 대구(자동차부품), 경북 구미(이차전지), 강원 횡성전남 군산(전기차)
** 군산, 울산 동구, 거제, 고성, 통영, 창원 진해구('19.4월→'20.4월), 목포·영암('19.5월→'20.5월)

□ 지속가능한 민간일자리 창출 지원과 핵심인재 양성

○ **규제샌드박스 4+1법*** 시행 및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산업**(수소차 등) **현장애로 규제** 혁신,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전략 투자**('20년 1조7천억) 등 신산업 육성기반 마련

*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19.1월), 「금융혁신법」·「지역특구법」('19.4월), 「행정규제기본법」('19.7월)

** 대구(스마트 웰니스), 충북(스마트 안전제어), 세종(자율주행), 제주(전기차 충전서비스) 등 14개

○ **「제2벤처붐 조성방안」** 마련, **신산업·고기술 스타트업 발굴, 민간주도 벤처투자 생태계 확산**으로 유니콘 기업(6개 → 11개) 증가 및 사상 최대 신규 벤처투자 달성*

* 신규벤처투자액: ('17년) 2.4조원 → ('18년) 3.4조원 → ('19년) 4조원

○ 소재·부품·장비 투자 확대('19년 8,327억원 → '20년 2.1조원), **반도체·조선업·섬유패션 등 업종별 혁신전략** 수립, 시스템반도체·바이오·미래차 등 **민간투자 프로젝트**(185개, 490조원) **발굴·지원***

* 120조 규모 초첨단 반도체 단지(용인) 조성('19.3월) 등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민간투자 프로젝트 44개 추가 발굴

○ **신기술분야 훈련***(폴리텍 하이테크과정 등) 강화, **AI대학원 선정**(3개교) 및 빅데이터 등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나노디그리 운영**(3개 분야, 10개 교육과정) 등 인재 양성

* 4차산업 선도인력양성('18년 921명 → '19년 1,278명), 폴리텍 하이테크과정('18년 538명 → '19년 784명)

□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일자리 확충

○ 생활안전·복지·소방·경찰분야 등 **일상생활 서비스 확충**을 위해 **현장민생 공무원**(국가직 19,182명, 지방직(~3분기) 11,705명) **충원**

○ **보육·요양·보건의료** 분야 등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9.1만개 확충, 사회서비스원**(서울, 대구, 경기, 경남 등 4개소 시범 운영) 설립 등 생활 밀착형 서비스 확대

○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 정규직 전환 추진**('17~'19년 누적 17.9만명)

□ 근로여건 등 일자리 질 향상으로 일터와 삶의 변화

○ **최저임금 단계적 인상**('18년 7,530원 → '19년 8,350원) 등으로 임금분배구조 개선*, **주52시간제 현장안착 지원 및 애로 해소 노력**** 등 근로여건 개선 견인

* 임금 5분위 배율: ('17년) 5.06배 → ('18년) 4.67배 / 조사 시작('08년) 이후 최저

** 경사노위 합의한 탄력근로제 입법 추진, 계도기간 부여·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 등 보완대책 마련

○ **고용·산재보험 보장성 강화***, **비정규직의 임금**(월평균 8.5만원↑)·**사회보험 가입률**(고용보험 1.3%p↑, 건강보험 2.1%p, 국민연금 1.3%p↑) **증가** 등 근로자 권익보호 및 고용안정성 제고**

* (고용) 영세자영업자·기업 대상 확대 등, (산재) 건설기계업종 특고 산재보험 적용('19년~) 등

** 상용직 비중(%): ('16년) 66.4 → ('17년) 67.4 → ('18년) 68.6 → ('19년) 69.5, 통계작성('89년) 이후 최대

○ **근로시간단축청구권*** 도입('19.8월), **가족돌봄휴직제도** 대상 확대(조부모·손자녀 추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유급 3+무급 2→유급 10일) 등 일·생활 균형 기반 확산

* 가족돌봄·건강·은퇴준비·학업 사유로 단축, 단축 후 주15~30시간 근무 등('20년~)

보완·개선 사항

□ 경제 주력인 **40대 고용회복에 정책역량 집중**

○ 주요 고용지표 개선에도 불구, **제조업 고용 감소*** 등으로 **40대 취업자 수 감소세**** **지속**

* 제조업 취업자 증감(천명) : ('16년) △21→ ('17년) △18 → ('18년) △56 → ('19년) △81

** 40대 취업자 증감(천명) : ('16년) △59 → ('17년) △50 → ('18년) △117 → ('19년) △162

☞ **제조업의 스마트화, 융복합화 등 경쟁력 강화**와 함께, 중·장년층에 대한 **교육·훈련 및 전직서비스 강화** 등 고용지원 정책 마련 필요

□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에 주력

○ 신산업 관련 규제(원격의료 등) 논란 지속 등으로 지속가능한 **민간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저해**

☞ 이해관계자간 **소통 지원을 통한 이해 조절 강화로** 신산업과 기존 산업의 상생기반 마련 및 일자리 창출 노력 필요

□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노력 강화

○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에도 불구, 최근 빠르게 성장 중인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고용안전망 미비**, 특고·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여전

* 연간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만명): ('16년) 34.9 → ('17년) 30.6 → ('18년) 35.8 → ('19년) 51.0

☞ 플랫폼 노동자 **실태조사 및 개선 대책** 마련, 특고·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관련 입법 조속 추진,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 내실화 등을 통한 고용안전망 보완

□ **장애인 일자리 지원** 강화

○ 공공기관*·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 및 **고용의무 이행비율 저조** 지속

* 고용률 ('16년) 2.96% ('17년) 3.02% ('18년) 3.16%/ 고용의무 이행비율 ('16년) 62.6% ('17년) 55.7% ('18년) 56.6%

** 고용률 ('16년) 2.56% ('17년) 2.64% ('18년) 2.67%/ 고용의무 이행비율 ('16년) 46.6% ('17년) 45.0% ('18년) 44.4%

☞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률 제고** 등을 통한 일자리 지원 강화 노력 필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 남북미 대화·협력 및 강한 국방 구현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공고화** 및 **평화경제 기반 구축** 추진

❖ **더 크게 협력하고 더 넓게 개방**하여 동아시아 **교량국가의 길** 마련

주요 정책성과

□ 남북미 판문점 정상회동 등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에 적극적 역할

○ **한미 정상회담**(3회), **제2차 북미정상회담**(2.27~28) 및 **남북미 판문점 정상회동**(6.30) 등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지속

○ 대통령 스웨덴 연설(6.14), 유엔총회 기조연설(9.23), 한-아세안 공동비전 성명(11.25) 등 다양한 계기를 통해 **국제사회 지지 확보 및 협력 촉구**

□ 주변국과의 **긴밀한 소통**으로 안보·경제 등 **외교 현안 적극 대처**

○ **(미국)**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공조* 및 경제협력**으로 **한미 동맹 강화**

* 정상회담(3회) 등 고위급 교류, 한미 연합연습·훈련 조정, 전작권 전환 공동검증 등
** 한-미FTA 개정협정 발표(1월), 한국산 철강관세 인하(6월), 미국산 LNG 추가수입 계약(9월) 등

○ **(일본)** 과거사 문제·여타 현안을 **분리 대응하는 투트랙 기조** 하에 고위급 교류*등을 통해 열린 자세로 **대화·협력 추진**

* 한일 정상회담(12.24), ASEAN+3 계기 한일 정상간 환담(11.4), 한일 총리회담(10.24) 등

○ **(중국) 교류·협력 복원 가속화*** 및 **국민체감형 실질협력 추진****

* 한중 정상회담(6.27, 12.23), '19년 중국인 방문자수 전년 대비 25% 증가(601만명, 잠정) 등
** 미세먼지 공동대응, 중국 불법조업 감소, 광복군 총사령부 복원('19.3월) 등

□ 한반도 평화정착을 뒷받침하는 **튼튼한 국방 구현**

○ **'20년 국방예산** 최초 **50조원 돌파**로 **전방위 안보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

* F-35A 스텔스 전투기·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도입,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추진 등

○ 병 봉급* 인상·장병내일준비적금** 활성화, 일과후 휴대전화 사용, 여군 보직 확대 등 **복무여건 및 인권 개선**, 대체복무 개선으로 병역이행의 **공정성 제고**

* ('19년)40.6만원 → ('20년)54.1만원(병장), ** '19.12월 27.3만명('18.8월 출시, 입대인원의 약 85%)

○ 미래 연합방위 주도를 위한 **기본운용능력**(IOC) **검증***, **한국군 핵심군사 능력**의 **한미 공동평가**('19.3~9월) 정상 추진으로 **전작권 전환준비 차질없이 진행**

* 검증단계 : 기본운용능력(IOC, '19.8월)→ 완전운용능력(FOC, '20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 평화와 경제가 선순환하는 **평화경제** 및 **국민이 체감하는 평화** 추진

○ 평화경제 실현을 위한 **사업 발굴** 추진 및 **국내외 공감대 형성***,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항공·산림협력 등 **남북 경협 지속 추진****

* 평화경제 청년 아이디어톤(8월), 한반도 평화경제 국제포럼(10월), 평화협력 국제포럼(11월) 등
** 철도·도로 남북 공동조사 자료 교환(2월), 남북 국제항공로 신설을 위한 남측 항로 마련(4월), 양묘장 현대화 사업 대북제재 면제 확보(7월) 등

○ **DMZ '평화의 길'** 조성·개방* 및 국제평화지대화 제안**, 판문점 견학장소 확대 운영***등 **평화체험의 장 마련 및 평화관광 중심지 여건 조성**

* 3개 구간(고성 4.27, 철원 6.1, 파주 8.10) 개방 후 누적 방문객 약 1만 5천명(~'19.12월)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공동 등재, 대인지뢰 제거 협력 등(UN총회 기조연설, '19.9.24)
*** 도보다리·기념식수 장소 등 4.27남북정상회담 주요 현장, 2만3천여명 견학(총 452회, '19.5~9월)

○ 서해5도 어장 확장* 등으로 **안전한 바닷길 조성, 평화경제 마중물 역할**

* 연평어장 등 245㎢ 확장(여의도 면적의 약84배) 및 야간조업 1시간 허용(일출·일몰 전후 30분)

□ **남북간 소통 및 교류협력 동력 유지**

○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를 통한 **인도적 지원·협력 추진**

* WFP·유니세프의 북한 영양지원·모자보건 사업에 900만불, WHO의 북한 의료지원 사업에 남북협력기금 500만불 공여 완료 등 세계 최대 규모인 1,400만불 지원
** 인도적 지원(의약품, 옥수수, 밀가루 등) : 총 46건, 174억원 상당 반출승인(~'19.12월)

○ 365일 24시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운영**으로 남북간 **상시 소통체계 유지**

○ 전국 13개 **화상상봉장 개보수** 완료(3~4월), 화상상봉·영상편지 관련 대북제재 면제 확보(3월), 영상편지 제작사업(6~12월) 등 **이산가족 상봉 준비**

○ 2032 올림픽 공동유치 추진 등 **체육 분야 교류협력 유지**

* 2032 올림픽 남북공동유치 의향서 전달 및 2020 올림픽 공동입장·4개 종목 단일팀 구성 합의(남북-IOC 고위급회의, 2.15 스위스), WT-ITF 태권도 시범단 남북 합동공연(4월, 오스트리아·스위스) 등

□ **신남방정책 본격 추진** 및 **외교·교역 다변화**로 **보호무역주의 대응**

○ **아세안 10개국 순방** 조기 완료(9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한-메콩 정상회의(11.25-27) 개최 등 **신남방정책 추진 가속화**

○ 러시아 실질협력 증진*, 중앙아 5개국 정상급 교류** 등 **신북방정책 추진기반 강화**

* 가스·철도 등 중점분야 협력을 위한 「9개다리 행동계획」 서명(2월), 한러 정상회담(6.29) 등
** 대통령 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방문(4월), 국무총리 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 방문(7월)

○ 세계 최대 메가 FTA인 **RCEP 협정문 타결***(11.4), 신규 FTA 추진(인니, 이스라엘, 중미, 영국)**등으로 **교역 다변화 추진**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 세계GDP 27.3조불(32%), 인구 36억명(48%), 교역 9.6조불(29%)
** 한-인니 CEPA 타결(11월), 한-이스라엘 FTA 타결(8월), 한-중미 5개국 FTA발효(10월), 한-메르코수르 FTA협상 실시(4회), 한-영 FTA 비준(10월)

보완·개선 사항

□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 필요**

○ 북미간 실무협상('19.10.4~5, 스톡홀름) 이후 **비핵화 협상 재개 지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으로 **안보**에 대한 **우려 증대**

○ 국제사회 대북제재 및 북한 태도 등으로 **남북 협력 사업 차질**

☞ 북한과의 **지속적인 대화, 북·미 대화 촉진** 및 **국제사회 지지** 확보 등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다각적 역할** 필요

□ 무역분쟁, 보호무역주의 등에 따른 **국제 통상질서 변화 대비**

○ 미중 무역분쟁,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 WTO 상소기구 기능 정지* 등 **국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증대**

* 미국의 WTO 상소위원 임명 반대로 WTO 상소기구(Appellate Body) 작동 중단('19.12월)

○ 불확실성 증대 시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부정적 영향 우려**

☞ 외교·무역 다변화로 **새로운 통상 환경에 대비**하고, 통상 규범 선진화 논의 및 WTO 등 다자 통상체제 발전에 **적극적 역할 필요**

* 신남방·신북방정책 고도화, 기존FTA 활용도 제고, 양자·다자간 신규 FTA 확대 등

□ **대화 등을 통한 한일관계 개선 모색 필요**

○ 경색되어 있던 **한일관계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 중이나,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수출규제 조치, 지소미아 문제 등 **주요현안 미해결 상태**

* 한일 총리회담(10.24), 지소미아 종료 통보(8.23) 효력 일시정지 및 WTO 제소절차 정지(11.22) 등

☞ 한일 정상회담('19.12.24)에서 조성된 우호적 분위기를 토대로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대화를 통한 적극적 문제 해결 노력** 필요

□ **외교 현장 공무원 등의 기강 확립 및 사고 방지 대책 필요**

○ 재외공관·외교현장의 **잇단 사건·사고 발생**으로 **외교 신뢰도 저하 우려**

* (해외) 한미정상 통화 내용 유출(5월), 주몽골대사 부당지시(5월), 주일총영사 성추행 파문(7월) 등
(국내) 구겨진 태극기 배치(4월), 발틱3국을 '발칸'으로 오표기(3월) 등

☞ 철저한 점검과 보안 관리, 시스템 보완 등을 통한 **재발 방지책 마련** 필요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 획기적 권한 이양 및 재정 분권을 통해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 추진, 주민참여 확대로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

❖ 지역 혁신기반을 강화하여 **국가균형발전 실현**, 사람과 환경 중심 농정 구현을 통해 **살고 싶은 농산어촌 조성**

주요 정책성과

□ 연방제에 준하는 자치분권 및 주민참여 기반 마련

○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지방자치, 균형발전 등 현안을 논의하는 제2국무회의로서 **중앙지방협력회의*** 입법 추진,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시행('19.7월)

* 대통령(의장), 국무총리·시도지사협의회장(부의장), 17개 시도지사 및 중앙행정기관장으로 구성

** 중앙부처가 법령 제·개정시 국가·지방간 사무배분의 적정성, 자치권 침해 여부 등을 행안부와 사전 협의(자치권 침해여부 421건, 지자체 의견조회 127건('19.7~12월))

○ 주민중심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31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추진, **기능중심 포괄적 사무이양**을 위한 **「지방이양일괄법」**** 국회 통과('20.1월)

* 획기적인 주민주권 구현, 자치단체 실질적 자치권 확대, 자치단체 투명성·책임성 제고, 중앙-지방 협력관계 정립 및 사무수행 능률성 강화 등 4개 분야, 21개 과제

** 지방이 더 잘할 수 있는 16개 부처 소관 46개 법률의 400개 사무 일시에 지방 이양

○ 주민투표 대상 확대를 위한 **「주민투표법」 개정*** 추진, 주민소환 청구요건 완화를 위한 **「주민소환법」 개정**** 추진, 조례발안 활성화를 위한 **「주민조례발안법」 제정***** 추진

* 주민투표 대상 확대(투표대상 조례명시→삭제), 주민투표 청구시 전자서명 허용

** 서명자 수 청구요건을 인구 규모별로 세분화·완화

*** 주민이 단체장을 경유하지 않고 지방의회에 직접 발의, 청구연령 하향(19세→18세) 등

□ 지방재정 확충 및 재정분권 확대

○ '22년까지 **국세-지방세 비율 7:3** 달성을 목표로 **국세의 지방세 전환***을 통해 추가 조세부담 없이 '20년 **국세 8.5조원**('19년 3.3조원) 지방 이양

* 지방소비세율 : ('18년) 11% → ('19년) 15% → ('20년) 21%

○ **2단계**('21~22년) **재정분권 범정부 협의체 구성**('19.9월)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 및 자율성 확대를 위한 제도 개편방안 논의 본격화

○ 소방직 국가직화와 소방인력 충원을 위해 **소방안전교부세 비중 확대***

* 담배분 개별소비세 중 소방안전교부세 비중 : ('18년) 20% → ('20년) 45%

□ 예산과정 국민·주민 참여확대 및 지역 자율성 제고

○ **국민참여예산**(정부) 및 **주민참여예산제**(지자체)를 통해 국민·주민 예산과정 참여강화

* ('19년) 38개 사업, 928억원 → ('20년) 66개 사업, 2,694억원
** ('18년) 1.2만개 사업, 1.13조원 → ('19년) 1.9만개 사업, 1.38조원

○ **3.5조원(균특회계) 규모 국가사업 지방 이양**('20년 예산반영), 정부-지자체 간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 도입**으로 지역의 자율적 사업 추진 역량 제고

* 홍성(유기농업), 완도(해양치유) 등 11개 사업 선정, 3년간 1,000억원 지원('19년 300억원)

□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수립**('19.1월) 및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타면제**(23개 사업 25조원, '19.1월)를 통해 지역주도 자립 성장기반 마련

* 5년('18~'22년) 간 총 175조원(국비 113조원, 지방비 42조원) 투입
** 지역전략산업 육성(5개), 인프라 확충(7개),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5개), 삶의 질 제고(6개)

○ 14개 **국가혁신클러스터별 R&D 지원**('19년 420억원), 부산(블록체인)·세종(자율주행) 등 14개 **규제자유특구** 및 **경제자유구역 후보 지구 선정**을 통해 신산업 거점화 촉진

* 광주(미래형자동차, AI융복합 등 4개), 울산(수소산업, R&D밸리 등 3개), 황해(시흥 배곧)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연장**,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방안** 및 **지역 상생형 일자리 확산**을 통해 지역산업 활력 회복 촉진

* 5개 지역(거제, 통영·고성, 창원, 목포·영암·해남, 울산 동구), '19.5월 → '21.5월
** 지자체·중앙정부가 보조금·자금 지원, 세제지원,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 도로·용수 인프라 구축, 정주여건·근로환경 개선 등 제공('19.2월)
*** 광주('19.1월), 밀양('19.6월), 대구('19.6월), 구미('19.7월), 횡성('19.8월), 군산('19.10월)

○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본구상 발표('03년) 이후 과학기술기획평가원(충북 음성) 이전으로 16년 만에 수도권 소재 **153개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완료**('19.12월)하여 **혁신도시 활성화 기반** 확보

□ 생활SOC 확충 및 도시재생·어촌뉴딜 사업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

○ **생활SOC 3개년계획** 수립('19.4월), 문화·돌봄·공공의료시설 등 **생활SOC 확충**('19년 8.6조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 제고**

* 3년간('20~'22년) 간 국비 30조원 투입, 지역 생활SOC 시설 확충

○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노후 주거지 생활인프라 확충, **어촌뉴딜 300 사업**으로 **쾌적한 어촌 정주환경** 조성

* ('17년) 68곳 → ('18년) 100곳 → ('19년) 116곳
** ('19년) 70곳 → ('20년) 70곳 이상 → ('22년까지) 300곳

□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 세종시 기능 강화**

○ **행안부**('19.2월)·**과기정통부**('19.8월) 이전, **세종의사당 설치 추진**(설계비 예산 10억원), **세종 중심 근무 정착 방안*** 추진 등으로 **세종시 행정수도 기능 강화**

* 국무회의·차관회의 등 정례회의체 원칙적 세종 개최, 세종소재 부처 장차관 서울 집무실 폐쇄

○ 서울-세종 고속도로 **세종-안성 구간 1년 조기 착공**('19.12월)으로 수도권과 세종시 간 **접근성 제고**

□ **농산어촌 소득 안전망의 촘촘한 확충**

○ 경영규모에 따른 단가차등 및 소규모 농가에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공익형 직불제 도입**으로 중·소농 지원강화, 쌀산업 보호를 위해 **관세율 513%** 유지

○ **쌀값 안정세 유지*** 및 **밭·수산직불금 인상**** 등으로 농림어업인 소득 증가***

* 쌀값(80kg) : ('17년) 15.6만원 → ('18년) 19.3만원 → ('19년) 19.0만원

** 밭/수산직불금 : ('18년) 50/60만원 → ('19년) 55/65만원

*** 농가 : ('17년) 3,824만원 → ('18년) 4,207만원 (10.0%↑)
어가 : ('17년) 4,901만원 → ('18년) 5,184만원 (5.8%↑)
임가 : ('17년) 3,459만원 → ('18년) 3,648만원 (5.5%↑)

○ **재해복구비 인상*** 및 **재해보험 보장성 강화****로 소득안전망 확충

* 25개 항목 단가 인상(실거래가 70% → 80%) 및 곤충, 곤충사육사 등 10개 항목 추가

**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 : ('17년) 69개 → ('18년) 73개 → ('19년) 78개

○ 선제적 예방조치, 철저한 방역체계 구축을 통해 **조류독감**(AI)·**구제역 발생 감소***,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 등 **가축전염병 피해 최소화**

* AI 발생 건수 : ('17~'18년 동절기) 22건 → ('18.3월~현재) 0건
구제역 발생 건수 : ('17년) 9건 → ('18년) 2건 → ('19년) 3건

** '19.9.16 최초 발생(경기 파주), 민·관·군 총력대응으로 10.9 이후 추가 발생 차단

□ **농어촌 복지지원 강화**

○ 농촌 어디서나 편리하게 보육·보건서비스(30분), 문화·여가서비스(60분), 응급상황대응(5분)이 가능하도록 **3·6·5 생활권 구축 확대***

* ('17년) 67개 → ('18년) 624개 → ('19년) 1,058개

○ **농업인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월 지원액 확대**** 등 농촌형 복지지원 강화

* 국민연금 최대지원액 : ('18년) 4만 950원 → ('19년) 4만 3,650원 (2,700원↑)

** 건강보험 최대지원액 : ('18년) 9만 2,430원 → ('19년) 9만 5,660원 (3,230원↑)

○ 청년층 포함 농림어업 분야 **취업자수 5.5만명 증가**(전년동기 대비), 귀농 지원강화 및 농어촌 환경개선 등으로 **젊은 층 귀농·귀촌 지속***

* 연평균('17~'18년) 귀농·귀촌 인구 50만명 중 40대 이하 33만명(66%)

보완 · 개선 사항

□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험성 대비**

○ 급격한 저출산·고령화 추세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인구 유출**로 인해 **지역 시군구 상당수**가 사라지는 **지방소멸*에 대한 우려 증가**

* 소멸위험지역 : ('13년) 75개 → ('18년) 89개 → ('19년) 97개 (고용정보원, '19.11월)

☞ **재정·일자리 지원, 교육·복지, 생활환경 개선** 등 **소멸위험지역 대상 정책 발굴** 필요

□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 수립 가속화**

○ 국세의 지방세 전환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재정 상황이 열악***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자립 성장** 및 **지역 간 균형발전 제약**

* 재정자립도 : ('17년) 53.7% → ('18년) 53.4% → ('19년) 51.4%

☞ 추가 지방세 확보, 중앙-지방 간 기능 조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등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 신속 수립**

□ **혁신도시의 자족 기능 확충 및 지역거점 간 연계 강화**

○ 혁신도시 클러스터 내에 **기업 입주율이 저조***하여 **지역 혁신 및 창업 생태계 경쟁력 확보 한계**

* 기업입주율('19.3분기) : (전국평균) 38.4%, (광주전남) 17.6%, (강원) 8.4%, (제주) 5.6% 등

☞ 혁신도시 **정주여건 인프라 확충** 및 **혁신도시와 주변 산업단지 등 거점 간 연계 강화**로 클러스터 내 **기업입주 및 혁신창업 활성화**

□ **동물감염병의 해외 신규질병 유입 가능성 대비**

○ **방역 취약국**(중국·동남아 등) **인접***, 철새 등 **야생동물 이동 및 출입국자 증가****로 바이러스 유입에 따른 **신종 동물감염병 발생 가능성 증가**

*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중국 선양지역 방문여행객 반입 물품에서 검출('18.8월)

** '18년 출입국자 8,890만명 ('14년 대비 212%↑)

☞ 신규 질병 해외유입 차단을 위해 주변 인접국과의 **동물감염병 정보 교류** 및 **국제 공동연구 활성화 추진**

국민이 주인인 정부

❖ 권력기관 개혁과 **반부패·공정사회 추진**으로 **정의로운 나라 실현**
❖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보답** 및 **정부 신뢰도 제고**

주요 정책성과

□ 권력기관에 대한 견제와 통제 장치 마련 및 민주적 개혁

○ 검찰의 기소권 독점을 65년만에 폐지하는 **공수처 설치법 제정**('19.12월) 및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권력기관 권한 분산** 및 **상호견제체계 구**축

* 검·경을 대등협력적 관계로 개선하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20.1월)

○ 특수부 축소 등 **검찰 조직 개편*** 및 검사 징계·감찰 등 **통제 강화****로 **검찰 중립성·공정성 제고**

* 직접수사 축소 및 형사·공판 기능 강화, 검사 외부파견 제한을 위한 규정 제·개정('19.10월)
** 징계부가금 강제집행 근거 신설 등 「검사징계법」 개정('19.4월), 검찰에 대한 법무부 직접감찰 확대 등 「법무부 감찰규정」 개정('19.10월)

○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경찰대학 개혁**, 정보경찰 축소*** 등 **경찰권 비대화 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 추진**

* 국가·자치경찰의 조직·사무·운영 등을 규정한 「경찰법」·「경찰공무원법」 개정안 발의('19.3월)
** 병역·학비 등 특혜축소 및 여성비율상한 폐지 등 경찰대학 개혁방안 발표('19.5월)
*** 정보경찰 인력 감축('19.2월) : 전년대비 11.3%↓ ('18년) 3,358명 → ('19년) 2,979명

□ 국민 인권보호 강화 및 범죄로부터 안전 확보

○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 추진* 등 **수사절차**에서 **인권침해 방지****

* 수사단계까지 국선변호를 확대하는 「형사소송법」·「법률구조법」 개정안 국회제출('19.11월)
** 포토라인·공개소환·피의사실공표 금지 및 심야조사·부당별건수사 제한 규정 마련('19.10월), 인권감독관 구속피의자 면담제 전국시행('19.9월), 영장심사관 확대배치('18년 23명 → '19년 169명)

○ 아동학대·성범죄 **집중 단속***, 현장중심 경찰 증원·과학수사 장비 및 기법 도입 등 **치안 인프라 강화****로 **국민 안전 제고**

* (아동학대) 전년대비 검거인원 22.1% 증가, ('18년) 4,143명 → ('19년) 5,058명
(여성범죄) 여성안전기획관 신설 등 여성범죄전담체계 구축, 특별단속실시('19.2~5월)
** 경찰인력 증원('18년 2,057명 → '19년 4,582명), 3D 범인식별 기술개발 등

□ **반부패 개혁** 및 **생활 속 적폐 해소**를 통해 **공정사회 기반 조성**

○ **대통령 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 시민참여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통한 전방위적 반부패 개혁으로 **국가 청렴수준 개선***

* 부패인식지수(국제투명성기구, '19.1월) 역대 최고점수(57점), 45위('17년 대비 6단계↑)

○ **생활적폐 개선 대책* 추진**으로 국민 생활 속 **불공정**과 **병폐**를 **해소**

* (채용)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182건 적발), 피해자 구제 및 개선방안 마련('19.2월)
(교육) 학사비위 사학교원에 공무원 징계기준 적용('19.4월), 국공립 교원·자녀 상피제 도입('19.9월)
(공직) 공공갑질·전관특혜 방지 등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공직자윤리법」 개정('19.4·12월)

○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및 **부정·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19.4월), 공익신고 관련 자문변호인단 구성('19.7월)
** 「공공재정환수법」 제정('19.4월), 「범죄수익은닉규제법」·「부패재산몰수법」 개정('19.4·8월)

□ **독립·호국·민주화**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예우 강화**

○ **3·1운동·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및 **국가유공자 지원 강화****

* 유관순 열사 최고등급 서훈 추서('19.3월), 충칭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복원('19.3월),
국외 독립유공자 유해봉환 예우 강화, 여성독립운동가 적극 발굴('17년11명→'19년113명) 등
** 국가유공자 명패 증정('19.1월~, 18만5천가구), 국립 괴산호국원 개원('19.10월, 2만기 규모),
순직군인 보상을 강화하는 「군인재해보상법」 제정('19.12월) 등

○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 공식 지정**('19.9월) 및 **과거사 해결 노력 강화***

* 제주 4·3 사건에 대한 군·경 공식 사과('19.4월), 5·18 진상조사위원회 출범('19.12월),
故박종철 고문치사 등 검·경 과거 잘못 공식 사과(검찰총장 '19.6월, 경찰청장 '19.7월)

□ **언론·정치적 자유 확대** 및 **정부신뢰 제고**

○ **참정권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19.12월)* 및 **언론 등 표현의 자유 신장****

* 선거참여연령 하향(만19세→18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 언론자유지수 순위 지속 상승 : ('17년) 63위 → ('18년) 43위 → ('19년) 41위 (아시아 1위)

○ **정부 혁신***과 **적극행정**** 추진으로 국민의 **정부신뢰도 상승*****

* OECD 공공데이터 개방지수 1위('19년), 온라인 통합민원 '정부24' 사용자 1천만명 돌파,
칸막이 없는 원스톱 민원처리를 위한 '정부합동민원센터' 개소('19.10월)
** 적극행정 면책요건 완화 등 「공무원징계령」 개정('19.8월), 공무원 책임보험 도입('19.11월)
*** OECD 정부신뢰도 대폭 상승 : ('17년) 32위 → ('19년) 22위

보완 · 개선 사항

□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철저

○ 공수처 설치·검경수사권 조정 입법 이후, 기관 간 조직이기주의 등으로 개혁 후속조치 지연 우려

☞ 하위법령 정비, 업무체계 개편 등 **제도안착 단계**에서 수사공백 등 **국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처간 협업 강화** 필요

□ 제도에 내재한 비리·불공정 개선

○ 지속적 반부패 대책 추진에도 불구, 사회지도층에 의한 **채용·입시비리** 등 편법·반칙 논란으로 **국민들의 상실감**은 여전

☞ 합법적 제도에 내재한 불공정까지도 해소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 강화** 및 **기존 제도 사각지대 보완**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 추진

□ '가짜 독립유공자'에 대한 **신속한 조사**로 **보훈 정의 회복**

○ '독립유공자 공적검증위원회'의 **허위공적·친일행적·중복포상 여부** 등에 대한 **전수조사 진행 부진***

* 우선 검증 대상자 587명 중 273명 조사 완료('19.12월)

☞ 조직·인력 확충 등을 통한 독립유공자 **공적 전수조사 조속 이행** 및 **허위등록자 서훈 취소, 보상금 환수** 등 후속 조치 철저

□ 과거사 진상조사기구 조속 구성

○ 진실·화해위원회 미구성*으로 **과거사 진상조사** 등 **문제해결 지연**

* 진실·화해위원회 설치근거인 「과거사정리기본법」 법사위 계류 중('17년 국회 발의)

☞ 「과거사정리기본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공감대 형성** 등 **지속적인 입법 노력 필요**

2. 규제혁신

1 평가 개요

□ 평가목적

○ 중앙행정기관의 **규제혁신 노력과 성과**를 점검·평가하여 규제혁신의 **실효성 확보** 및 **국민 체감도 제고**

□ 평가대상

○ 26개 중앙행정기관

구분	기 관 명 (직제순)
장관급 (17개)	기재부, 교육부, 과기정통부, 법무부,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여가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방통위, 금융위
차관급 (9개)	식약처, 관세청, 조달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농진청, 산림청, 특허청

* '19년 규제정비 종합계획상 과제수가 2개 이하인 17개 부처는 제외

□ 평가방법

○ 평가의 **전문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평가지표 특성에 따라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병행

- **'민관합동 규제혁신 평가단'***을 구성하여 분야별 노력도 등 **정성평가** 실시

  * 평가위원 :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규제관련 민간전문가 등

- 규제영향분석 충실성, 규제혁신 만족도의 경우 **외부 전문기관**(규제관련 연구원, 전문 리서치 기관)을 통해 **정성평가** 실시

- 부처별 추진실적을 제출받아 규제조정실 담당관이 **정량평가** 실시

□ 평가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규제정비 (60)	신산업 관련 과제 정비	•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규제 샌드박스, 신산업 현장애로 개선 실적	15
		• 기업 건의과제 개선 실적	5
	기존규제 정비	• 규제정비 종합계획 과제, 민생분야 규제 등 정비	15
		• 일자리 창출 규제, 규제개혁신문고 건의 등 정비	20
		•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도 운영	5
규제심사 (20)	규제심사 절차 준수도	• 규제심사절차 준수 및 규제영향분석 등	15
	일몰규제 정비	• 재검토형 일몰규제 정비 및 등록 실적	5
규제혁신 체감도 (20)	규제혁신 소통 실적	• 규제혁신 관련 언론·현장소통 실적 등	10
	규제혁신 만족도	• 규제혁신 만족도 조사	10
기타 (가감점)		• 적극행정 활성화 노력	±2
		• 규제혁신 교육	+1

2 평가 등급

* 직제순

구분	장관급 기관 (17개)	차관급 기관 (9개)
S	과기정통부	식약처
A	농식품부, 환경부, 해수부, 금융위	관세청, 산림청
B	기재부, 법무부, 행안부, 문체부, 산업부, 복지부, 고용부, 국토부, 중기부	조달청, 소방청, 문화재청, 특허청
C	여가부, 방통위	경찰청, 농진청
D	교육부	-

3 총 평

□ 주요 성과

○ **(先허용-後규제 확산) 규제 샌드박스** 제도 본격 시행,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방식의 적용대상 확대 등 **규제체계 패러다임 전환 확산**

- 특히,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성공적 정착**으로 당초 목표인 100건을 상회한 **195건**을 **달성**하고, 일부 **사회적 갈등 과제**에 대한 **돌파구 역할**의 **질적 성과 창출**

  * 과기정통부·산업부·중기부·금융위, 분야별 규제특례심의쵯 운영 → 총 195건 승인
  (국토부)택시동승 중개서비스, (식약처)공유주방, (문체부)공유숙박 등

○ **(규제개선 방식 혁신) 정부가 직접**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를 **확대** 적용하여 **불필요한 규제 정비**

  * 숏부처, '정부입증위' 구축 완료('19.3월) / 건의과제·행정규칙 대상 총 1,017건 규제개선
  (복지부) 난임부부 시술지원 신청 연령제한 폐지
  (과기정통부) 세대단말기 등 공동주택 홈네트워크 의무설치 대상 설비범위 완화

○ **(적극행정 강화)** △기관장 역할·책임 강화 △적극행정 면책지원·보상 등 **적극행정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공직사회 봄업** 등 **적극행정 문화 확산**

- **적극행정지원위원회** 등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 창출 뒷받침**

  * (국세청) 적극적 법령해석으로 수제맥주 키트 제조회사에 주류 제조업 면허 발급,
  (관세청)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우리 기업의 원재료 수입 시 24시간 통관지원

○ **(민생·현장중심 규제혁신)** 국민·기업과의 **전방위적 소통**을 통해 개별 국민·기업들에게 **'작지만 의미있는' 현장 중심**의 **규제애로 해소***

  * △신산업 현장애로(69건) △기업건의 해소(258건) △규제개혁신문고(241건) 등
  (식약처) 어린이용 의약품이 없는 소아혈액암 환자에게 성인용 신약 사용 허용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공유경제** 등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핵심규제**(big issue)에 대한 **전략적·단계적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국민·기업들의 규제혁신 **체감도 제고 필요**

○ **각 부처별**로 설치된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통한 **경직적인 규제해석 관행 타파** 필요

4 분야별 평가결과

'先허용-後규제' 패러다임 전환 확산

주요 실적

□ **규제 샌드박스 제도 본격 시행**

○ **ICT·산업융합·금융혁신·지역특구** 분야에서 **규제특례심의委 구성·운영*** → **총 195건 승인**(목표 100건 대비 약 2배 성과)

* 법적 근거(시행일): △정보통신융합법('19.1.17, 과기정통부) △산업융합촉진법('19.1.17, 산업부) △금융혁신지원특별법('19.4.1, 금융위) △지역특구법('19.4.17, 중기부) △행정규제기본법('19.7.17, 국조실)

○ 그간 **경직된 규제**로 어려움을 겪던 **신산업과 신기술**에 시장진출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 갈등 과제**를 **해결하는 돌파구**로 작용하는 **성과** 창출

* (산업부)국회 수소충전소, (국토부)택시동승 중개서비스, (금융위)ON-OFF 방식 해외여행자 보험, (식약처)공유주방, (문체부)공유숙박 등

□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입법방식 유연화) **확대 적용**

○ 「**행정규제기본법**」에 '**우선허용-사후규제**' 방식 명문화('19.7월)

* (국조실·법제처) 법령 제·개정시 유연한 입법방식 적용, 규제 및 법령심사기준 개정·시행

○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중앙법령·지자체 자치법규**까지 **확대 적용**

* (중앙법령, '19.4월) "산업단지 입주업종 규제방식 네거티브化(산업부)" 등 132건 개선
(자치법규, '19.9월) "금융관련 서비스업 확대(부산시)" 등 142건 개선

□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구축**

○ 자율주행차('18.10월)에 이어 **드론 분야**에 대해 미래 기술발전을 예측하여 **선제적으로 규제이슈를 발굴, 정비방안 마련**('19.9월, 국토부·과기정통부)

* 드론 '활용' 분야와 '국민안전' 분야를 균형있게 고려 → 예상가능한 규제이슈(35건) 발굴·정비 추진
(국토부·해수부) '하늘길 신호등'(드론교통관제시스템, UTM) 도입

개선·보완 방향

□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사회적 갈등 이슈**(공유경제, 바이오·헬스 등)에 대한 **돌파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나, **기업들의 실질적인 체감으로 이어질 필요**

규제개선 방식 혁신

주요 실적

□ 규제개선 과정에서 **입증책임**을 **국민·기업**에서 **공무원**으로 변경하는, **甲과 乙을 바꾸는 혁신** 추진

○ **경제계 건의***에 따라 「**정부 입증책임제 추진계획**」 수립(국조실, '19.1월)
→ 국조실 중심으로 일부 운영되던 것을 **全부처로 확대 시행****('19.3월)

* 대통령 '기업인과의 대화'시 건의('19.1.15)

** 권익위, 법제처 등 규제가 거의 없는 8개 기관을 제외한 35개 부·처·청 대상
→ 각 부처별로 민간전문가가 과반수인 **'정부입증위원회'**(위원장: 차관 또는 민간인) 운영

□ **전 부처, 입증책임제를 본격 적용하여 총 1,017건 규제 개선**(3~6월)

○ **(건의과제)** 각 부처에서 그간 **"수용곤란"** 또는 **"중장기 검토"**로 통보했던 건의과제를 **부처별 규제입증위에서 재검토** → 1,248건 중 **375건 개선(30%)**

* (복지부) 난임부부 시술지원 신청 연령제한(44세) 폐지
(해수부) 노인 비율이 높은 도서민에 대해 여객선 승선시 신분증 검사 절차 간소화
(중기부) 중소기업 창업 후 면적 20% 이내 증가시 변경승인 면제

○ **(행정규칙)** 고시·예규 등 행정규칙(552개)에 대해 **부처별 규제입증위에서 1차 정비** → 규제 3,527건 중 **642건 폐지·완화(18.2%)**

* (과기정통부) 공동주택 홈네트워크 의무 설치 설비를 20개에서 6개로 완화
(식약처) 제품 개발단계의 임상시험에 사용할 의료기기에 대한 승인절차 완화
(법무부) 외국 체류허가 등 위임장 제출 면제대상을 '배우자 및 직계가족'에서 '민법상 가족'으로 확대

개선·보완 방향

□ 규제 정부 입증책임 방식을 **법령 전반**(법률~시행규칙)**으로 확대 시행**하고,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부처별 규제입증위 운영의 내실화** 필요

공직자의 적극행정 강화

주요 실적

□ **법령·제도 정비 등 적극행정 추진체계 구축**

○ 범정부 종합대책인 **'적극행정 추진방안'*** 마련(국조실, '19.3월)

* △기관장 역할·책임 강화 △적극행정 면책지원 및 보상 △소극행정 혁파 △현장과 소통하는 문화

○ 관련 **법령 제·개정①, 사전컨설팅제 확대②, 소극행정 혁파③, 평가④** 등 후속 **제도 정비 신속 완료**

①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정('19.8.6, 인사처) 등 총 22개 법령 및 지침 제·개정
② 44개 중앙부처, 全 지자체(17개) 도입 / ('18년) 679건 → ('19.10월말) 1,055건 활용
③ 소극행정 신고센터 설치('19.3월, 권익위) → '19.11월말 기준 22,350건 접수
④ 중앙행정기관 종합평가('20.1월, 인사처), 지자체 적극행정지도 작성('20.1월, 대한상의)

○ **부처 특성**을 반영한 **'적극행정 강화방안'*** 마련(금융위·공정위·국세청, '19.12월)

* △(금융위)익명성 보장의 의견개진 창구 마련, 핀테크 등 혁신금융 활성화 △(공정위) 조사·제재 기준과 절차 개선 △(국세청)세무조사 부담완화 및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등

□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붐업 및 경제단체 등 민간과의 협력 강화**

○ **제도활용 + 사례발굴 및 교육** 등을 통한 **공직사회 붐업**

* (30개 기관) 차관회의 릴레이 발표('19.9~11월, 7차례)
(인사처) 적극행정 성과 공유대회('19.10월), 우수사례 경진대회('19.11월) 실시
** (국세청·기재부) 수제맥주 혁신기업 지원 →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개최, 주류 제조 면허 발급 결정('19.11월) 및 포괄적 지원을 위해 주세법 개정절차 완료('19.12월)

○ **경제단체와의 업무협약 체결** 등을 통한 **민관협력 강화**

* 국조실-중기중앙회 업무협약 체결 및 중기중앙회에 적극행정 소통센터 설치('19.12월)
** (인사처) 대국민 온라인 플랫폼 '적극행정 울림' 오픈('19.5월)

개선·보완 방향

□ **각 부처별**로 설치된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통한 **경직적인 규제해석 관행 타파** 필요

□ 경제단체의 규제애로 해소 요구가 많은 분야에 대해 **기관별 특성**에 맞는 **적극행정 모델 수립** 필요(환경·노동·산업 분야 등)

민생과 현장 중심 규제혁신 추진

주요 실적

□ 국민·기업과의 **전방위적 소통·협력**을 통해 **현장중심**의 **규제혁신 추진**

○ **주요 신산업** 분야(수소차, VR, IoT 등)를 선정, **현장애로 개선***(2차례, 69건)

* 현장소통('19년 14회)을 통해 과제 발굴 →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를 통해 개선 추진

** (산업부) 복층형 수소충전소 건설 허용, (문체부) 유원시설 VR 시뮬레이터에 영화탑재 허용

○ **주요 협·단체, 지자체** 등과의 **현장간담회** 개최(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 업종별 협·단체 및 11개 시도 간담회 실시, 기업불편 규제애로 258건 개선

** (관세청) 선박수리업 등록요건 완화(사업자등록증 추가) → 영세 조선소 해외수주 계약 성사

○ 인터넷·우편 등을 통해 **규제개혁신문고**로 접수된 다양한 규제건의 개선

* ('19.12월말 기준) 241건 규제개선

** (식약처) 어린이용 의약품이 없는 소아혈액암 환자에게 성인용 신약 사용 허용

○ 기타 **중소기업,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 규제개선

* (기재부) 혁신성장 옴부즈만 – 대한상의·관계부처와 협업, 30회 간담회 개최
(행안부) 지자체 규제건의 –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지방규제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
(중기부) 중소기업 옴부즈만 – 현장소통 74회, 규제애로 발굴 2,866건 및 872건 처리

□ **테마별 일괄정비**를 통한 **민생불편 규제혁신**

○ **지역제한**으로 인한 **국민불편***, **중소기업·소상공인 영업 전반 불편·부담**** **규제혁신**

* (지역제한) 영업·생활편의 제한, 행정서비스 이용 제한규제 개선 등 50건('19.4월)
(환경부) 타 지역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용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

** (중기·소상공인) 창업-영업-폐업-재창업 생애주기 전반 규제정비 140건('19.10월)
(복지부) 반영구화장 시술자격을 비의료인으로 확대하는 방안 마련

개선·보완 방향

□ **기업·지자체** 및 **일반 국민**들과의 **상시적인 소통 활동**을 **지속**하여 **규제 건의 해소 차원**에서 **민간과 정부와의 신뢰관계 구축** 필요

3. 정부혁신

1 평가 개요

□ 평가목적

○ 중앙행정기관의 정부혁신 추진실적을 기관별로 평가하여 정부혁신의 공공기관 확산 도모 및 국민의 삶의 질 개선

□ 평가대상

○ 43개 중앙행정기관

구분	기 관 명 (직제순)
장관급 (23개)	기재부, 교육부, 과기정통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여가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보훈처, 방통위, 공정위, 금융위, 권익위
차관급 (20개)	인사처, 법제처, 식약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병무청, 방사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농진청, 산림청, 특허청, 기상청, 행복청, 새만금청, 해경청, 원안위

□ 평가방법

○ 행안부 정부혁신 **'전문가 평가단'*** 및 **'국민평가단'**** 구성·운영

* (전문가평가단) 학계(16명), 민간 전문가(2명), 연구원(1명), 시민단체(1명) 등 20명

** (국민평가단) 주부, 대학생, 직장인 등 다양한 국민의 지역·성별·연령을 고려하여 선발(120명)

○ 평가지표 특성에 따라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 병행**

□ 평가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혁신역량・실행(10)		• 기관장의 혁신 리더십		5
		• 실행계획의 충실성 및 교육・학습활동		5
혁신성과	핵심사업(13)	• 기관대표 핵심사업의 추진성과		13
	포용적 행정(21)	•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적 가치 강화 정책조정 노력		10
		공공구매조달	• 기술개발제품 구매실적 및 혁신지향 공공조달 우수성과	5
			•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1.5
		균형인사	• 여성의 의사결정 권한	3
			• 장애인 고용의무인원 충족도	3
	참여와 협력(24)	국민참여	• 국민참여 제도 활용 성과	6
			• 정책결정 사전점검표 활성화	2
		정보공개 및 데이터 개방	• 정보공개	2.5
			• 공공데이터 개방 및 표준화 성과	2.5
		협업・조정・갈등관리	• 정책 협업・조정	2.5
			• 협업성과	3.5
			• 갈등관리	5
	신뢰받는 정부(17)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	• 부처별 신뢰도	±0.5
			• 부처별 청렴도(채용비리 실적지표 포함)	3
			• 성평등 기여도	2
		대국민 서비스 혁신	• 정부24에 공공서비스 목록 현행화	1
			• 선제적 서비스 성과	2
			• 첨단기술 활용 공공서비스 개선 성과	3
		행정 효율성	• 데이터 기반 행정 추진성과	2
			• 일하는 방식 혁신 추진성과	4
혁신성과홍보(5)		• 혁신성과의 홍보노력		5
국민체감도(10)		• 국민평가단 및 일반국민 혁신성과 체감도 평가		10
적극행정		• 적극행정 추진성과		+5

2 평가 등급

* 직제순

구분	장관급 기관	차관급 기관
S	-	-
A	과기정통부, 행안부, 농식품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인사처, 식약처,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산림청
B	기재부,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문체부, 산업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보훈처, 방통위, 권익위	법제처, 조달청, 통계청, 병무청 소방청, 문화재청, 농진청, 특허청 기상청, 해경청
C	통일부, 여가부, 공정위, 금융위	방사청, 행복청, 새만금청, 원안위
D	-	-

3 총 평

□ 주요 성과

○ **2019년**은 **정부혁신**을 **본격 추진**하여 국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혁신성과가 창출**되기 시작했고, **정부 신뢰도가 상승***

* 정부신뢰도(OECD) 10단계 상승(2年) : ('17년) 32위→('18년) 25위→('19년) 22위, 부패인식지수(국제투명성기구) 6단계 상승 : ('17년) 51위→('18년) 45위

○ **(혁신역량·실행)** 「**기관장 혁신 리더십**」 평가를 **새로 도입**하여 정부혁신에 대한 **기관장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기관 간 **학습**을 통한 **우수사례 벤치마킹 활성화***

* 혁신사례의 학습·공유의 장인 '혁신현장 이어달리기' 개최(7회), '정부혁신 사례지도' 공유(446건), 범정부 젊은 공무원 혁신모임 '정부혁신 어벤져스' 구성·활동(43개기관 497명)

○ **(포용적 행정)** '5대 중점 개선분야*'를 중심으로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추진****

* 아동, 장애인, 독거노인, 복지 위기가구, 학교 밖 청소년

** (복지부) 장기결석 데이터 등 활용하여 위기아동 조기발견,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바우처 제공(6,500명)
(환경부) 스마트 검침으로 독거노인의 물 사용패턴을 분석, 이상 감지 시 지자체 자동통지(840가구)

○ **(참여와 협력)** 환경·안전 등 **다양한 정책분야**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기관 간 협업, 민·관 협력**을 통해 **국민 체감형 성과** 창출**

* (환경부) 국민정책참여단을 통해 '차량2부제', '봄·겨울 석탄발전소 가동중단' 등 미세먼지대책 발굴
(과기정통부) 국민 참여를 통한 과학기술 기반 리빙랩 R&D 추진(미화원과 야간작업복 개발 등)

** (농식품부·해수부 등) 농축수산식품 원산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중복단속으로 인한 현장불편 최소화
(경찰청·카카오택시) 택시기사에 강력범죄자·치매노인 정보를 전파하여 조기 문제해결에 도움

○ **(공공서비스)** 임신·출산·사망 등 **생애주기별 주요시기**에 따른 **통합서비스를** 확대*하고, **디지털** 기반의 **편리한 공공서비스**를 제공**

* (행안부) 정부24를 통해 '맘편한임신', '행복출산', '안심상속' 등 생애주기 통합서비스 제공

**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서비스('손택스')를 통해 세금 신고·납부, 연말정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관세청) 종이로 된 세관신고서 대신 모바일로 여행자 휴대품 세관신고(자진신고 비율 4%p↑)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적극행정 **기관평가 강화**, 개인과 부서에 대한 **적극행정 인센티브 확대** 등 공직사회 **적극행정** 확산을 위한 **내실화 방안** 필요

○ 국민참여가 **단순 의견수렴·모니터링***에서 벗어나, **정책 결정과정에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필요

* 국민참여 범위 : 의견수렴(40%), 심의(22%), 자문(13%) 順('19.9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4 분야별 평가결과

포용적 행정

주요 실적

□ **'5대 중점 개선분야*' 중심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추진**

* 아동, 장애인, 독거노인, 복지 위기가구, 학교 밖 청소년

○ 아동·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안전망*** 강화

* (복지부) 장기결석 데이터 등 활용하여 위기아동 조기발견,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바우처 제공(6,500명)
(환경부) 스마트 검침으로 독거노인의 물 사용패턴을 분석, 이상 감지 시 지자체 자동통지(840가구)

○ 소외받는 국민이 없도록 **취약계층의 공공서비스 접근성*** **제고**

* (고용부) 장애인 취업지원 통합전달체계를 마련하고, 취업지원 서비스 연계('19년 375건)
(식약처) 소아 혈액암 환자 치료기회 확대(354명) 및 치료비용 절감(1인 3,600만원→300만원)

□ **재정·조직·인사** 등 **공공부문**에 **사회적 가치**를 실현

○ **공동체·취약계층 배려** 등 **사회적 가치**를 강화하는 **국가예산을** 편성*하고, **사회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정부조직·인력** 운영**

*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19년 35억→'20년 165억), 다함께 돌봄('19년 106억→'20년 338억), 장애인 직업능력 개발('19년 616억→'20년 813억), 사회적 기업 육성('19년 895억→'20년 1,131억)
** (유연성) 긴급한 사회현안(긴급대응반) 및 미래성장 과제(벤처형조직) 추진조직 설치 지원
(현장성) 현장공무원 중심의 충원으로 경찰 현장출동시간 단축('16년 6분51초→'19.6월 5분54초) 및 소방 구급차 3인(운전원+전문응급인력) 탑승률 제고('16년 39.5%→'19.6월 71.2%)

○ 공직 내 **여성 관리직 확대*** 및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 제고**

* 고위공무원단: ('18년) 6.7%→('19년) 7.8%(잠정), 본부과장급(4급이상) : ('18년) 17.5% →('19년) 20.8%(잠정)
(경찰청) 첫 여성 중앙경찰학교장 임명 / (국방부) 첫 여군 소장 임명(항공작전사령관)
** 여성위원 : ('18년) 41.9% → ('19년) 42.8%, 성과목표(40%) 조기 달성

개선·보완 방향

□ **현장**에서 복지안전망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하여, 서비스 혜택이 여전히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 집중 **발굴·해소**

* 북한 이탈주민 모자사망('19.7월), 서울 성북구 70·40대 네 모녀 생활고로 인해 자살('19.11월)

□ 타기관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해 **장애인 의무고용,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등 **법정 의무사항***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 강화

* 장애인 의무고용률(3.4%) 9개 기관, 중증장애인 생산품 의무구매(1%) 10개 기관 미달성

참여와 협력

주요 실적

□ **정책·예산·조직** 등 다양한 분야에 **국민의 참여 확대**

○ **예산·조직·법령** 등 **핵심과정***에 **국민 참여 강화**

* '국민참여 예산제' 사업 확대('19년 38개사업, 928억원→'20년 66개사업, 2,694억 편성), '국민참여 조직진단' 도입 및 인력배치(17개 부처, 제도개선안 258건 발굴), '국민참여 법령심사제' 운영(100건)

○ **환경, 안전**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

* (환경부) 국민정책참여단을 통해 '차량2부제', '봄·겨울 석탄발전소 가동중단' 등 미세먼지대책 발굴
(과기정통부) 국민 참여를 통한 과학기술 기반 리빙랩 R&D 추진(미화원과 야간작업복 개발 등)

□ **정보**와 **데이터**를 **국민 실생활**에 유용한 내용·형태로 **제공**

○ 안전·건강 등 **국민 관심분야***를 집중 공개하고, **핵심예산**** 집행정보 공개 확대

* (행안부) 교통사고·치안 등 생활안전지도 확대(4종→8종), (복지부) 전국 병원 비급여 진료비용 비교공개
** 기관장 外 실·국장까지 업무추진비 공개, 항공·숙박 등 집행내역별 해외출장경비 상세 공개

○ **데이터 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국가데이터맵**** 구축·공개

* OECD 공공데이터 개방평가 3회 연속 1위('15,'17,'19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18년 77개→'19년 96개)
** 국가데이터맵 1단계 구축·공개('19.4월), 개방데이터의 날짜·번호 등 표준화('19.4~6월)

□ **기관 간 협업, 민·관 협력**을 통해 **국민 체감형 성과** 창출

○ 협업에 대한 **보상체계**를 **제도화***하고, 협업의 **범위**를 **공공·민간**으로 확대**

* 협업 우수부서에 표창 수여 및 포상금 지급, 협업 우수직원에 특별승진에 준하는 가점 부여 등
** (농식품부·해수부 등) 농축수산식품 원산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중복단속으로 인한 현장불편 최소화
(경찰청·카카오택시) 택시기사에 강력범죄자·치매노인 정보를 전파하여 조기 문제해결에 도움

개선·보완 방향

□ 국민참여가 **단순 의견수렴·모니터링***에서 벗어나, **정책 결정과정에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필요

* 국민참여 범위 : 의견수렴(40%), 심의(22%), 자문(13%) 順('19.9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상당수 기관이 협업을 **정보공유**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 단순한 정보공유를 넘어 국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협업성과** 창출 필요

공공서비스

주요 실적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편리하고 유용한 공공서비스** 제공

○ **모바일**을 기반으로 생활밀착형 **대민서비스*** **편의성 제고**

* (행안부) 「정부24」를 통해 종이 대신 모바일로 전자증명서 발급, 전자지갑으로 문서유통(주민등록등초본)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서비스(손택스)를 통해 세금 신고·납부, 연말정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관세청) 종이로 된 세관신고서 대신 모바일로 여행자 휴대품 세관신고(자진신고 비율 4%p↑)

○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등을 **활용**하여 국민 **실생활에 유용한 서비스*** 지원

* (고용부) 인공지능(AI)이 이력서를 기반으로 구직자에 맞는 일자리 추천(더워크,The Work)
(외교부) 블록체인을 통해 재외공관에서 공증한 위임장에 대한 실시간 확인 시스템 마련(14개 은행)

□ **통합서비스**를 확대하여 **이용자 중심으로 공공서비스 개선**

○ 임신·출산·사망 등 **생애주기별 주요시기**에 따른 **서비스 통합안내·신청***

* (임신) 임신 후 받을 수 있는 패키지 서비스 통합신청, '맘편한임신' 도입 추진
(출산) '행복출산'을 통해 양육수당 등 출산지원 서비스 통합신청('19년 이용률 99.4%)
(사망) '안심상속'을 통해 상속인이 금융·토지 등 사망자의 재산(11종)을 통합조회

○ 관할을 넘어 **한 곳**에서, **한 번**에 **통합 민원서비스*** 제공

* 정부합동민원센터 개소('19.10월),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확대('18년 2곳→'19년 21곳)

개선·보완 방향

□ 확대되는 디지털 기반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 등 **기존 서비스 전달 창구**를 **개선**하고, 취약계층에게 실생활 중심의 **디지털 활용교육**을 지원하여 **디지털 격차 해소**

□ 이용자 중심의 통합서비스 혁신이 **은행** 등 **국민 생활영역**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민간 서비스까지 **협력기반 확대**

적극행정

주요 실적

□ 공직사회 **적극행정 확산**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제정**('19.8월)하고, 기관별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이행*

* 기관장 책임 하에 적극행정이 관리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부내확산 추진, 적극행정 교육기반 마련 및 우수성과 인센티브 등 환류방안 도입

○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확산* 및 **사전컨설팅 감사제도** 본격화**

* 절차 간소화로 신속행정 구현, 신기술 활성화 지원, 사회적 약자 보호규정 확대 해석 등 일선 공무원의 적극적 법령해석을 위해 분야별 사례 추가·반영

** 사전컨설팅제도 全부처 확산('18.12월), 접수건수 증가('18년 679건→ '19년 768건)

□ **국민편익 증진, 국제적 위상 강화** 등 적극행정 **우수사례** 도출

○ 기존관행에서 벗어나 **주도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국민편익 증진***

* (산림청·소방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소방력 동원, 13시간 만에 강원(고성) 산불 신속진압('05년 32시간)
(고용부) 자체개발한 근로시간 분석프로그램으로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 적발·시정지시(610억)

○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강화***

* (산업부) 한국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한 WTO 분쟁 최종 승소('19.4월)
(식약처) 유럽에 의약품 수출시 품질관리기준 확인서를 면제하는 'EU 화이트리스트' 등재('19.5월)

개선·보완 방향

□ 적극행정 **기관평가 강화**, 개인과 부서에 대한 **적극행정 인센티브 확대** 등 공직사회 **적극행정** 확산을 위한 **내실화 방안** 필요

□ **사전컨설팅 감사제도**, 공무원의 **공무상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공무원 책임보험'** 등 적극행정에 따른 **면책제도 활성화**

4. 정책소통

1 평가 개요

□ 평가목적

○ 국정과제 및 주요정책에 대한 국민소통 추진노력 및 성과를 평가하여 국민의 정책에 대한 이해 증진과 정책성과 체감 확산

□ 평가대상

○ 43개 중앙행정기관

구분	기 관 명 (직제순)
장관급 (23개)	기재부, 교육부, 과기정통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여가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보훈처, 방통위, 공정위, 금융위, 권익위
차관급 (20개)	인사처, 법제처, 식약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병무청, 방사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농진청, 산림청, 특허청, 기상청, 행복청, 새만금청, 해경청, 원안위

□ 평가방법

○ 문체부 민관합동 **'정책소통 평가지원단'** 구성* 운영

* 오프라인 평가 : 3개 그룹 각 7명(민간전문가 5, 문체부 국민소통실 2) 총 21명
온라인 평가 : 1개 그룹 민간전문가 10명

○ 평가지표의 특성에 따라 **정량·정성 평가 병행**

□ 평가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정책소통 활동 (30%)	정책소통 기획	• 주요정책 소통 계획 수립, 사전협의	45
	언론소통 활동	• 정례브리핑 활동, 일일보도 관리	
	온라인소통 활동	• 기관 SNS 운영, 온라인이슈 관리	
정책소통 성과 (50%)	기관장 정책소통 성과	• 언론 ·국민소통 성과, 위기상황 이슈관리	75
	언론소통 성과	• 방송 · 신문 · 인터넷 · 외신 소통활동 성과	
	온라인 정책소통 성과	• 기관 SNS 활동 성과, 디지털 캠페인 효과	
	부처협업 성과	• 보유매체·디지털소통 협업 성과	
	정책소통 기획 성과	• 정책소통 분기별 우수사례	
정책소통 체감도 (20%)	수용도	• 접촉도 / 관심도 / 필요도	30
	만족도	• 상호성 / 개방성 / SNS 소통만족도	
	지지도	• 정책 이해도 / 정책 전달 의도 / 기관 신뢰도	
	공감도	• 빅데이터 분석	

* 가감점 : 쉽고 바른 보도자료 사례 평가(±2점)

2 평가 등급

* 직제순

구분	장관급 기관	차관급 기관
S	-	-
A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인사처, 식약처, 국세청, 병무청, 경찰청, 행복청
B	교육부, 과기정통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산업부, 여가부, 국토부, 해수부, 보훈처, 공정위, 금융위, 권익위	법제처,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문화재청, 농진청, 산림청, 특허청, 해경청, 원안위
C	기재부, 법무부, 중기부, 방통위	방사청, 소방청, 기상청, 새만금청
D	-	-

3 총 평

□ 주요 성과

○ **기관장 언론홍보 및 현장소통을 통한 국민 신뢰 제고**

- 기관장 중심 온·오프라인 활동을 통하여 정책에 대한 국민 이해 증진 및 소통 노력 강화

* 기관장 SNS 채널 계정 보유 : ('18년) 16개(37%) → ('19년) 39개(91%), 전년 대비 54%p↑
** 기관장 현장소통 월평균 : 장관급 기관 18.9회(전년 15.8회 대비 19.6% 증가), 차관급 기관 7.9회(전년 5.7회 대비 38.6% 증가)

○ **범 정부 현안에 대한 협업 홍보 활성화**

- △일본수출규제 △아프리카돼지열병 △미세먼지 등 범정부 현안에 대한 주기적·상시적 소통협의체* 운영, 유기적 협력 소통 강화**

* 정책홍보전략회의(매주), 대변인협의회(매주), 온라인대변인협의회(격주) 개최, 정책발표 사전협의 ('18년) 273건 → ('19년) 330건, 전년 대비 21% 증가
** '19년 주요정책 인지도 및 홍보 효과(한국리서치) : 일본 수출규제 대응(92.8%),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88.9%), 미세먼지 정부대책(86.5%)

○ **디지털 소통 강화를 통한 국민 참여 및 소통 활성화**

- 총 31개 기관* 디지털 소통팀 구성('18년 13개, '19년 18개) 및 정부 디지털 소통 역량 강화, 소통 채널 다변화로 다양한 정보 제공**

* 31개 기관의 콘텐츠 반응 : 좋아요·댓글·공유 등 전년 대비 5억회 증가
** 43개 부처 SNS 채널 디지털 콘텐츠 증가 : ('18년) 8.8만개 → ('19년) 9.4만개, 6.7% 증가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단발성 협업 홍보가 아니라, 정책대상에 관계된 **다수 부처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지속 홍보**함으로써 국민 체감도 제고

○ **디지털 소통팀 전부처 확대**(13개 부처 추가) 및 인기 캐릭터 활용 등 파급력 있는 **핵심 콘텐츠 위주의 홍보 강화 필요**

4 분야별 평가결과

기관장의 정책 소통 및 부처 협업 활성화

주요 실적

□ 기관장 언론홍보 및 현장소통을 통한 국민 신뢰 제고

○ 장·차관 **중심** 방송출연, 인터뷰 등 **언론활동** 및 정책현장 설명회, 강연회 등 **현장소통** 활동 강화

* (행안부) 행안부 장관 강원도 산불 현장서 이·취임식 및 점검회의 실시
(농식품부)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역 현장을 수시 점검(23회)하여 방역 효과 및 정책 신뢰 제고
(문체부) VR, 모바일 게임산업 현장에서 간담회 실시, 실감형 게임 제작 지원 등 정책 제시
(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공급현장 방문(4회) 및 관련 사항 영상·카드뉴스로 제작·연계 홍보
(특허청)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여 반도체 등 현장 방문(5회), 지식재산권 애로 기업 간담회(4회) 등
(고용부) 최저임금 현장 안착을 위해 자동차업종 현장방문, 소상공인 등 간담회(7회) 실시

□ 범정부 현안에 대한 협업 홍보 활성화

○ 주요 정책 및 현안에 대한 **소통 전략 마련을 위한 사전협의 강화**

* 정책발표 사전협의 : ('18년) 273건 → ('19년) 330건, 21% 증가

○ 시의성 높은 소재 및 다부처 관련 이슈에 대한 **협업** 확대로 정책홍보 **시너지 효과 제고**

* (과기정통부·산업부·기재부) 일본수출 규제에 따른 범정부 대응
(농식품부·외교부) 아프리카 돼지열병 추가확산 방지 및 해외 유입방지 캠페인
(환경부등 16개부처) 미세먼지 엔드게임 웹툰 제작 및 유튜브 홍보

개선·보완 방향

□ 소통 전주기적 협업 강화

○ 단발성 협업 홍보가 아니라, 정책대상에 관계된 **다수 부처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지속 홍보**함으로써 국민 체감도 제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소통 확대

주요 실적

□ **범부처적 디지털 소통 역량 강화**

○ 총 31개 부처에 **디지털 소통팀을 구성**('18년 13개, '19년 18개)하는 등 디지털 소통 역량 강화

* SNS 채널 디지털 콘텐츠 : ('18년) 8.8만개 → ('19년) 9.4만개, 6.7% 증가
** 31개 기관의 콘텐츠 반응 : 좋아요·댓글·공유 등 전년 대비 5억회 증가

□ **국민 체감형 콘텐츠 제작·확산**

○ **국민의 삶**과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낸 **연성 콘텐츠** 생산

* (고용부) '웹툰 빨강머리 N'과 연계 직장내 괴롭힘 사례를 제작, 인스타그램 등 SNS 확산
(환경부) 부족한 물을 핵심 컨셉으로 환경 예능 유튜브 채널 운영
(농진청) 요리 레시피, 농촌체험 등 실생활 연계 콘텐츠를 제작하고 포털(네이버 'FARM')을 통해 전파하여 농업가치 공유·확산

○ **인기 캐릭터 및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디지털 콘텐츠 확대

* (외교부) EBS의 '펭수'를 활용하여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홍보
(인사처) 유튜브 채널(인사처TV) P크맨, 공무원 체험 콘텐츠 제작
(행복청) 세종시의 문화 여가 환경을 '자연소리 ASMR'이라는 콘텐츠 형태로 제작

□ **쌍방향 소통으로 정책에 대한 국민 참여 확대**

○ **온·오프라인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쌍방향 소통을 확대하고 정책에 **국민의 참여기회** 확대

* (국세청) 근로·자녀 장려금 공모전, 톡톡기자단, 소상공인 현장간담회 등 공감 소통
(병무청) 인기 플랫폼(틱톡)을 통해 '고맙군화' 해시태크 챌린지 실시, 좋아요 63만회 등 성과

개선·보완 방향

□ **디지털 소통팀 운영 전부처 확대**(13개 부처 추가)로 디지털 콘텐츠 공급물량 확대 및 적시성 제고

□ 인기캐릭터 활용 등 **파급력 있는 핵심 콘텐츠 위주의 홍보 강화 필요**

5. 지시이행

1 평가 개요

□ 평가목적

○ 각 부처의 **대통령 지시사항 이행상황 및 성과**를 **평가·환류**하여 지시사항의 **차질 없는 이행 및 성과 제고**

□ 평가대상

○ **(대상 지시사항)**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시달된 대통령 지시사항** 중 **부처별 추진 중이거나 '19년 종료**된 지시사항 (145건)

○ **(대상 기관)** 38개 중앙행정기관

* 지시사항이 없는 5개 기관(병무청, 행복청, 새만금청, 해경청, 원안위) 평가대상에서 제외

□ 평가방법

○ 지시사항별로 **±3점 가감점** 부여하여 **부처별 산술 평균**

□ 평가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계획수립 적절성	• 지시취지 부합여부, 내용 충실성 등	±1
추진성과	• 추진계획의 실제 이행여부 • 국민체감도 등 추진효과	±1.5
점검체계 운영	• 자체점검 추진실적	±0.5

2 평가 등급

* 직제순

구분	장관급 기관	차관급 기관
가점	과기정통부, 국방부, 산업부, 고용부, 국토부, 권익위	관세청, 경찰청, 특허청, 산림청
보통	기재부, 통일부, 법무부,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복지부, 환경부, 여가부, 방통위, 공정위, 금융위, 보훈처	인사처, 법제처, 식약처, 국세청, 조달청, 소방청, 통계청, 문화재청, 농진청, 기상청
감점	교육부, 외교부, 해수부, 중기부	방사청

3 평가결과

주요 실적

주요 국정방향 관련 지시

□ **경제활력제고** 및 사회 안전망 확충 통한 **포용성 강화**

○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한 공공·민간투자 활성화, **대통령**의 **적극적 소통 행보***를 통해 **투자심리 회복 촉진**

* 간담회 : 중소벤처기업, 대기업중견기업('19.1월), 소상공인('19.2월), 외국인투자기업('19.3월), 경제계('19.7월) 등
현장방문 : CES전시회('19.1월), 삼성전자('19.4월), 효성첨단소재, 현대모비스('19.8월), 삼성디스플레이('19.10월) 등

○ **주력산업 활력 회복**을 위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전략**'('19.6월) 수립, 서비스 산업 육성 및 내수진작을 위한 **관광·물류·콘텐츠 혁신전략** 발표

* 관광혁신전략('19.4월, 대통령 주재 관광전략회의), 물류('19.6월), 콘텐츠산업전략('19.9월, 대통령 주재 발표회)

○ 취약계층 맞춤형 일자리 지원강화, 사회안전망 확충 등으로 **분배지표 개선**, 정책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최저임금·노동시간 단축 정책** 보완*

* '20년 최저임금은 예년보다 낮은 2.8% 인상, 주52시간제 보완(계도기간 부여, 탄력근로제 확대시행 등)

□ **신산업** 육성, 혁신친화적 **벤처·규제**환경 구축 등 혁신성장 가속화

○ 대통령 주재 현장간담회를 통해 **시스템반도체**('19.4월)·**바이오**('19.5월)·**미래차**('19.10월) **3대 신산업** 발전전략 수립, 민간투자 프로젝트 발굴 등 대규모 투자* 추진

* '30년까지 투자계획 : (시스템반도체) 133조원, (바이오헬스) 40조원, (미래차) 60조원

○ **데이터·AI·5G 등 플랫폼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방안 마련

* '혁신성장 확산전략 및 전략투자방향'('19.8월) 통해 D·N·A 분야 1.7조원 투자 발표
** 대통령, 인공지능 컨퍼런스('19.10월)에서 정책지원 및 방향제시, 이후 '인공지능 국가전략' 발표('19.12월)

○ **제2벤처붐 확산전략**('19.3월)을 통해 민간주도 벤처활성화 및 혁신 창업생태계 구축, 신규벤처투자(4조원)·신설법인수(2년연속 10만개) 역대최고치, 유니콘 기업수 급증(11개)

○ **규제샌드박스** 홍보 및 기업참여 독려 등으로 195건 적용사례 발굴, **규제입증책임제** 도입*·**적극행정 확산****을 통해 규제추진체계의 혁신적 전환

* 대통령 주재 기업인과의 대화시 경제계 건의('19.1월) → 전부처 규제입증위원회 구축('19.3월), 1,017건 규제개선
** 수제맥주 키트 회사의 주류제조면허 발급을 위한 '적극행정지원위원회' 개최, 주세법 개정('19.12월)

□ **국민 삶 속**에 내재된 **특권 및 불공정 개선**

○ 대통령 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 개최('19.6월, 11월) 및 확대 개편(부패→공정성 대책 포괄), 전관특혜 근절*, 불공정 탈세행위 대응 강화 등 **불공정 개선대책 추진**

* 고위공직자 안전·방산·사학에 대한 취업심사 강화, 연고관계 변호사 회피·재배당 절차 도입 등

○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19.11월),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및 제도개선안('19.2월)·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등으로 교육·채용비리 등 **생활속 불공정 개선**

○ 병역자원 부족문제 해결 및 공정성 제고 위해 병역 **대체복무 개선방안 마련**('19.11월)

주요현안 대응 지시

□ **일본수출규제 적극 대응**

○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 긴급 추경안 편성,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특허대책 마련 등 즉각 대응으로 공급안정성 확보 및 자립화 기반 마련

* 대통령 주재 경제계 간담회('19.7월), 기업현장방문(효성탄소섬유, 현대모비스 등 '19.8월), 현장국무회의(KIST, '19.9월)

○ WTO 제소 및 외교적 대화 노력 병행, **한일정상회담**('19.12.24)을 통한 해결 모색

□ **국민건강 · 안전보호**를 위한 현안대응

○ 일본수산물 분쟁 관련 **WTO 승소**('19.4월), 석탄재 등 4개 **주요 수입폐기물 안전관리 강화** 방안 마련('19.8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도입('19.11월)

○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음주운전 단속·처벌 강화** 및 집중 홍보 실시

* 통학버스내 하차확인장치 작동의무화('19.4월), 스쿨존 과속단속 카메라 의무화·사망사고 가해자 가중처벌 근거 마련('19.12월), 스쿨존 개선 예산 증액('20년 1,275억원, 전년대비 5배)

○ **강원산불** 조속 진화('19.4월),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 대응('19.5월)

개선 · 보완 방향

□ 권력기관 개혁, 방산비리 근절 등 구조적 개혁과제의 **정책성과 체감도가 낮은 상황**

⇒ 법제화 지속 추진 및 법 통과이후 **하위법령 정비** 등 후속조치 추진 철저

* △(검경수사권 조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자치경찰제) 「경찰법」·「경찰공무원법」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 「국정원법」 △(방산비리 근절) 「방위사업법」 등

□ 부처간 협업부족으로 **추진이 지연**되거나 **장기화에 따른 추진동력 미흡**

* 위기청소년 선제적 발굴 및 지원을 위한 통합정보망 구축 지연(e-아동행복시스템, NEIS, 행복e음 등과 연계)
** 스텔라데이지호 침몰('17.3월) 이후, 심해수색('19.2월)에도 불구, 사고원인 규명 등 지연

⇒ 부처간 협업·신속한 절차추진·이해관계자 소통 등으로 **진전된 성과 창출**

Ⅲ. 기관별 종합 평가

Ⅲ. 기관별 종합 평가

1 평가 개요

□ 평가목적

○ 일자리·국정과제,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에 대한 **평가결과**를 **기관별**로 **합산·발표**하여 기관 차원의 **국정성과 제고 독려**

□ 평가방법

○ 일자리·국정과제(65점), 규제혁신(10점), 정부혁신(10점), 정책소통(15점) 점수를 합산

○ 지시이행은 가감점(±3점)으로 반영

2 평가 등급

* 직제순

구분	장관급 기관	차관급 기관
S	농식품부	-
A	과기정통부, 산업부, 복지부, 중기부, 금융위	법제처, 관세청, 조달청, 소방청, 농진청, 특허청
B	기재부, 교육부, 국방부, 행안부, 문체부, 환경부, 고용부, 여가부, 국토부, 해수부, 보훈처, 공정위, 권익위	인사처, 식약처, 국세청, 병무청, 경찰청, 문화재청, 산림청, 행복청, 새만금청, 해경청
C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방통위	통계청, 방사청, 기상청, 원안위
D	-	-

Ⅳ. 후속조치 계획

Ⅳ. 후속조치 계획

□ 평가결과 환류 및 개선조치

○ 일자리·국정과제 등 개선 필요사항을 각 부처에 통보, **개선계획 수립** 하도록 조치

○ **기관별** 개선계획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20년도 정부업무평가시 반영**

○ **미흡 기관**에 대해서는 **컨설팅** 추진

□ 평가결과 우수기관 및 유공자 포상

○ **우수**(S·A등급) **기관**에 대해서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포상금 지급**

○ 성과창출에 기여한 공무원 등에 대한 **훈·포장** 등 **수여**